한국NGO학회 2018년 연례합동학술회의

“민족주의,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남북통일”

일 시 : 2018. 12. 14.(금) 13:00~17:30
장 소 : 아주대학교 본관 율곡관 2층 204호
주 최 : 한국NGO학회, 단군학회, 한민족학회,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 프 로 그 램 □

시간	소요	내 용
13:00~13:30	30	참가자 등록 및 인사
13:30~14:00	30	**개회식** -공동개회사: 정영훈(단군학회/한민족학회 회장) 박상필(한국NGO학회 회장) -환영사: 조정훈(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소장) -축사1: 김영래(전 동덕여대 총장) -축사2: 강철규(전 우석대 총장)
14:00~15:40	100	**<세션1> "남북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중심이념은 무엇인가?"** **민족주의(Nationalism)VS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발표1: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정영훈(단군학회/한민족학회 회장) -발표2: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국 시민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지향" 박상필(한국NGO학회 회장) -사회(좌장): 이필상(전 고려대 총장) -토론1: 구혜영(한양사이버대 교수) -토론2: 윤대식(한국외국어대 교수) -토론3: 조중근(전 장안대 교수) -토론4: 정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5:40~15:50	10	**휴 식**
15:50~17:30	100	**<세션2> "남북한의 역사관에 대한 갈등** **민족주의 역사관 VS 세계시민주의 역사관"** -발표1: "한국의 민족주의 현실과 대안모색" 신운용(안중근평화재단 책임연구원) -발표2: "한국사회 역사관의 사색당파성" 정형욱(아주대 교수) -사회(좌장): 김석준(전 안양대 총장) -토론1: 윤창원(서울디지털대 교수) -토론2: 김지영(숭실대 교수) -토론3: 황재동(새만금이주민센터 센터장) -토론4: 신용우(간도학회 이사)
17:30		**총회 및 만찬**

□ 목 차 □

세션 1

발표 1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 정영훈 ····· 5
발표 2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국 시민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지향 / 박상필 ····· 21
토 론 ····· 57

세션 2

발표 1 한국의 민족주의 현실과 대안모색 / 신운용 ····· 63
발표 2 한국사회 역사관의 사색당파성 / 정형욱 ····· 93
토 론 ····· 141

세션 1

□ 사 회 □

이필상(전 고려대 총장)

□ 발 표 □

- 정영훈(단군학회/한민족학회 회장),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 박상필(한국NGO학회 회장),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국 시민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지향”

□ 토 론 □

구혜영(한양사이버대 교수)

윤대식(한국외국어대 교수)

조중근(전 장안대 교수)

정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2018년 연례합동학술회의

세션 1 〈발표 1〉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정영훈
(단군학회/한민족학회 회장)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분단체제극복 과제와 민족주의

정영훈(단군학회/한민족학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이 글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과제와 관련하여 민족주의가 가지는 의의와 그 바람직한 모습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통일 과제는 당연히 민족주의적 주제인 것처럼 이해되어 왔었다.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은 민족주의적 언술을 통하여 천명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와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민족을 불편해하거나 그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탈민족주의 세력이 많이 확산되어 있고,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민족을 호명함이 없이 시민이나 국민의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접근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가령 뉴라이트로 불리는 보수우익 세력은 민족 대신에 시민이나 문명.자유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앞세울 것을 강조하였고, 다문화주의나 세계시민주의자들 쪽에서도 민족정체성을 지구촌공동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는 관점의 연장선 상에서, 민족정체성이 아닌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 시기의 통일정책에서는 통일의 주체나 성격을 논의함에 있어 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성이나 공동운명성 같은)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민이나 국민이라는 용어 및 경제적 이익 같은 관점을 더 자주 거론했었다. 탈민족론이 확산되고 탈민족론에 기반한 통일논의가 전개되는 현실은, 민족주의가 통일과제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의에 대해 재정리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같다.

다른 하나는 통일과제와 관련하여 기왕에 제기된 민족담론들 중에는 왜곡되거나 오도된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분단시대를 통하여 남북 두 개의 국가는 민족을 독점하고 자신만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승계한 것으로 주장했다. 민족은 반공과 권위주의 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숨쉴 수 있었고, 국가와 권력이 인정하는 한계를 벗어난 민족담론은 단죄되었다. 통일문제 역시 권력에 의해 이용되어 왔다. 통일관련 논의는 권력만이 독점하였고, 민간의 논의는 통제되었다. 일방이 전체 한반도를 차지하는 흡수통일만이 추구되었고, 상대방은 악마로 규정하는 대신에 자신만을 정의의 편이라 주장하는 냉전적 통일론이 지배하였다. 그 결과 권력이 통일을 운위할수록 통일로부터 멀어지는 비극적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남북의 권력은 구성원들에게 안보불안감을 제고시킴으로써 내부를 단속하였고, 필요하다면 적대적 공생전략도 마다하지 않아왔다. 두 개의 국가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적 인권도 허용하지 않고 민족과 인권을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시켰다.

잘못된 민족주의담론이 통일과제를 잘못 이끈 경우도 없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단일국가통일론이다. 이 단일국가통일론은 전체 민족과 국토를 하나의 통일국가 밑에 통합해야 한

다는 당위론을 가리키는데, 한민족사의 경험과 관련하여 그 당위성이 부각되면서 당연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가령, 제국주의 외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으로 단결하여 자주역량을 결집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민족의 입장을 강력하게 도모하기 위해서도 단일의 국가 밑에 통일된 접근이 중요했다. 두 개 국가로의 분단이 전쟁과 소모적 대결을 결과한 점도 단일 국가로의 통일을 요구하였으며, 오랜 기간 단일국가 속에서 생활해온 전통 또한 분단된 상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런 요구와 관성은 전체 민족을 하나의 튼튼한 국가밑에 통일해야 한다는 단일국가통일론을 지지하게 하였고, 그리하여 1920년대 중반의 민족유일당운동이후 민족통일전선운동-좌우합작운동-남북협상운동에 이르는 통일민족주의운동은 단일의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최종적 운동목표로 상정했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좀더 다양하며 창조적인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 같다. 민족주의의 본질을, 영역국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민족적 공동운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의 복지와 이익을 도모하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찾는다면, 굳이 하나의 국가로의 통일이 고집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한국사 속에서의 단일국가통일론은 민족적 이익이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에서가 아니라, 야심가들의 권력의지나 진영의 확장의지를 충족하는 데에 이용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적 복지를 위해서 시급한 것은, 단일국가통일보다는 소모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데 뜻이 있던 야심가들은 민족성원이 갖고있는 통일에 대한 순수여망을 단일국가통일론으로 몰고가서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켰고 전쟁까지도 정당화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통일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민족주의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통일과제를 위해 민족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좀더 실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를 위해서는 민족통일과제와 관련하여 민족이 호명되어온 역사와, 남과 북의 공동선언들에서 민족주의가 통일의 기조이념으로 강조되어온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오도되기도 해왔던 과거를 염두에 두면서 바람직한 민족주의의 작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일도 필요하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민족주의는 통일의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민족적 당위론과 동포애라는 감성에만 호소해서도 안디며 그것만으로 모든게 정당화되는 시대도 지났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통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조건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하겠다. 민족주의를 동원하지 않고는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민족주의여야 하는가. 오도될 수 있고 왜곡되어온 과거의 민족담론들을 넘어서 전체 민족의 복지를 도모하는 의지이자 기획으로의 민족주의가 취해야 할 입지와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다시 제기되는데, 이런 질문들은 우리 학술사를 통하여 진지하게 던져지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이런 실제적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좀더 근본적인 질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성찰에 기반하여, 한국에서 전개된 여러 사조 중 무엇이 민족주의였던지를 살피고, 통일을 위하여 민족주의가 분투하다 좌절한 역사에 대해서도 먼저 정리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사를 통하여 민족주의는 전체 한반도 주민을 동질적 공동운명체로 상정하고 민족복지를 위한 민족의 국가를 추구하는 새로운 공동체기획으로 제안되었었다. 그리고 민족적 자주독립과 통일을 향한 실천운동으로 활성화되었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이같은 기획과 실천운동은 근현대사가 보여주듯이 실패로 끝났다. 한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백성으로 전락했다가 다시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것은 민족주의의 취약성이나 실패로 규정돼야 할 대목들이다. 물론 민족주의가 실패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해도, 민족주의는 안팎으로부터 제기된 원심력방향의 분열-해체요인들을 극복하고 한민족이라는 단일의 민족집단을 유지.형성하는 데는 성공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구성원들에게 심어준 민족적 동질성과 공동운명성이라는 관념(의식)은 통일된 공동의 미래를 모색함에 있어 중대한 기반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통일국가 건설을 방해하는 힘들의 압력에 말려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 좌절의 결과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75년간의 소모적 대결로 귀결되어 갔다. 이제 70년 냉전체제의 막바지에서, 이제는 민족주의가 다시 활성화되어 평화와 통일과제를 주도하는 주역으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제와 관련하여 민족주의는 냉전적 기득권에 종속되어 작동되고 있는 두 개의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동력이 되어야 하고, 민족사상 두 번째의 남북국시대를 해소하고 전체 한민족의 복지를 제고하는 운동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만년'으로 운위되는 오랜 민족사에 축적된 경험과 지혜에 기반하여, 분단체제에 이익의 뿌리를 내리고있는 현실의 권력과 가치체계와 질서를 반성.비판하고 새로운 공동체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이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주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통일 문제에서 민족주의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가 민족주의의 주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배경을 부각시킬 것이다. 둘째는 한국사 속에서 통일민족주의운동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나 민족주의는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상적 기초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분단후 남북간에 합의된 통일관련 선언에 대해서도 더듬을 것이다. 셋째로,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분단체제가 70년이상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검토하고, 그것이 민족에 대한 배반이자 반역으로서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굴레라는 점을 재확인한 기초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민족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필 것이다. 논의는 민족주의의 본질에 대해 살피고 통일문제가 민족주의의 주요 관심사임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한다.

2. 민족주의와 민족통일

가. 민족주의의 본질 : 세계관으로의 민족주의

민족과 민족주의는 그 본질과 의의에 대한 이해에서 혼선이 매우 심한 용어이다. 우선 영어 표현인 Nation은 민족 외에 국민과 국가로도 번역되는데, 이 세 개념은 그 지칭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민족은 에스닉 정체성에 기초한 집단이며, 국가는 국민.국토.주권을 가진 권력기관을 가리키는데 대해, 국민은 국가의 주권적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민족'의 개념을 [문화적.혈연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공속의식으로 결속한 인류집단]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이다. 민족주의 역시 혼선이 심한데, [민족적 이익.자주독립.통일.발전

등을 추구하는 사상] 정도의 의미로, 그 정책지향에만 초점맞추어 규정하면 혼선이 계속된다. 누구나 민족적 이익과 통일.독립을 외치지만 그것이 최종적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고 모든 민족담론에 진정성이 동반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일정한 세계관이 동반된 현상으로 좀더 명확히 해놓고 관련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때 민족주의가 기반하는 세계관은 민족중심적 세계관이라 지칭할 수 있을텐데, 그에는 (1) 인간이 갖게되는 다양한 정체성 중에 민족적 정체성을 가장 우선적이고 의미있는 정체성으로 간주한다는 점과, (2) 정치적.경제적.사회적.종교적 등 다양한 차이와 이해관계를 넘어서 민족을 단위로 한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 (3) 국가는 민족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민족의 기관이라 생각한다는 점, (4) 동포에 대한 사랑과 민족집단에 대한 헌신을 촉구하는 윤리적 명제를 동반한다는 점, (5) 민족적 안전과 발전, 자주독립.통일 등 민족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지향으로 표출된다는 점 등의 속성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이같은 세계관은, 한국사 속에서 보면, 한말의 신채호로부터 1930-40년대 조소앙.안재홍 등의 통일민족주의로 이어져오는 민족주의사상사 속에 선명하게 공유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주독립과 통일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뒤로 미루면서 헌신해온 무명.유명의 숱한 투자와 지사들이 자신의 삶과 행동에서 기반하고 있었던 가치관이자 인생관이기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를 그가 기반하고 있는 세계관의 측면에 초점맞추어 파악하면, 민족주의를 다른 유사 이데올로기운동과 구분짓는데 유리하고, 민족주의와 통일문제 같은 실천적 주제에 접근함에 있어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민족주의와 민족주의 아닌 것의 구분은 이 민족중심적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 아닌 다른 정체성을 우선적 정체성으로 간주하고 있다던지, 민족안에서 공동운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부하고 민족 아닌 다른 정체성에 기반한 공동체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다. 또 민족을 주권자로 보지않고 객체나 지배대상으로 설정하는 관점도 민족주의가 아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중심적 세계관에 기반하여 민족공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하는 사상.운동.의식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정의 사상이나 운동흐름이 민족주의적 세계관을 천명한다고 해도 더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다. 곧 그 진정성에 대한 것이다. 아무리 민족을 앞세운다고 해도, 그 궁극적 관심사가 민족의 복지를 위한 데 있지않고, 사적 이익이나 취향을 도모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진정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이비민족주의로 규정되어야 한다. 한국사속에서 찾아지는 민족담론의 (특히 권력자들이 주창한 민족담론의 경우) 많은 부분은 진정성이 결여된 사이비민족주의로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본다.

진정한 민족주의와 사이비민족주의를 구분한 데서 더나아가, 좋은 민족주의와 나쁜 민족주의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 민족을 공동운명체로 간주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이나 통일, 공동이익 같은 목표를 위해 헌신의 윤리를 실천하였다고 해도, 민족주의가 상대하는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설정이 조화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인류사에 해악을 끼치고 종국적으로는 민족에도 부담을 주는 사조가 되고 말 것이다. 민족과 세계가 공존하고 개인과 민족이 공존하는 민족주의가, 구성원의 동의와 최대한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운영될 때 좋은 민족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김에, 민족주의의 본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가지 지점을 더 언급하고자 한다. 곧, (1) 민족주의를 Nation state에 종속된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민족주의에서 국가는 민족의 복지를 위한 장치로 의미부여된다는 점과, (2) 민족주의는 집단정체의식으로 표출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민족적 공동운명성을 현실속에 구현할 수 있는 특정형태의 공동체를 추구하기 마련이라는 점, (3) 민족주의는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본성의 요구에 응답하여 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 (4) 현실속의 민족주의는 다양한 운동목표를 두고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마련이며, 묵시적 민족감정 정도로도 표출되지만 구체적 전략이론의 형태로 제시되기도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민족주의가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그 기반하는 세계관의 이질성때문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의 차이때문이기도 하다. 곧,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공동체상이 구현되면 손해를 보는 쪽으로부터 반발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많은 경우 현존질서를 타파하여 민족단위의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므로, 기존의 질서에 이익의 뿌리를 두고있는 진영으로부터 공격받기 마련이다. 민족주의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본성의 요구에 부응하여 출현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다. 그것은 말과 문화 및 외양이 같은 동족집단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더 신뢰하게 되는 인간본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말은 민족주의를 요청한 인간본성이 변화하지 않는 한 민족주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민족주의나 민족정체성이 쉽게 포기되거나 변화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견해는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생산적인 자세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한 토대위에서 그를 옳은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활용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나. 민족주의와 통일과제

민족주의는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이유로 공격받는다.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주장들의 핵심적 논거를 간추리면, (1) 사회내부의 다수자 편에 서서 소수를 억압 배제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는 견해와, (2) 국제적으로도 갈등을 야기하고 침략과 인종학살 같은 반인도적 행태를 결과한다는 견해, (3) 자민족중심적.자기도취적 판단을 고수하는 관계로 현실과제를 해결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견해, (4) 지구촌으로 나아가는 인류사의 추세에 맞지않는다는 견해, (5) 객관성.보편성.과학성을 선호하는 합리적 지성에 반하는 성향을 갖고있다는 점, (6) 민족자체가 근대이후의 국가권력과 자본이 만든 상상의 산물인 데다 민족주의 역시 특수이익을 반영한 현실조작적 이데올로기라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많은 경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고 평가나 전망에서도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민족주의 주변에서 이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관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비판의 상당부분은 민족주의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를 권력에 이용하고 오도한 엘리트들과, 사적 욕구들을 도모하는 데 악용한 천박한 개인과 집단들에게 책임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민족주의가 자기를 통합하고 지키는 과제와 관련하여 내부의 이질적 요소들을 통제하고 억제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적 욕구들을 절제하고 민족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촉구

하는 것이나, 민족적 정체성과 고유적 전통에 자긍심을 표명하는 것도 민족주의의 본질적 지향에 속하는 부분이다. 자기민족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몰두하고,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민족성원의 처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도 필연이다. 민족적 생존에 대한 안팎의 위협이 강대할수록, 정체성과 결속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며, 외부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는 것도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민족정체성을 정립하고 공동체적 동질성과 공동운명성을 고취하는 과정에서 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보다는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고 감성에 호소하기도 하는 데, 그 역시 비판하기만 할 일은 아니라 본다.

민족주의가 외부세계와 꼭 불화한다고 보는 것도 편견이다. 자기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동포들과 결속하면서도 타민족과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내적 결속과 민족적 역량의 극대화를 강조한다 하여 권위주의독재를 합리화하지는 않는다.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공동체주의를 전체주의라 규정해서도 안 된다. 내부의 정의를 추구하는 강한 도덕적 지향은 독재나 전체주의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타성이나 침략성·호전성·인종청소 같은 비인도적 현상들 역시 민족주의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민족주의가 비합리적 요소에 의지하는 바 크다고 해도, 그들 모두가 남을 향한 적대감이나 자기미화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 가능성들은 개방적 소통과 자기점검을 통하여 얼마든지 통제될 수 있는 것이다. 민족은 인류가 공동의 복지와 자기확인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가치이자 공동체유형의 하나이고 민족주의는 그 같은 가치의 구현을 내걸고 제시된 사상이자 이데올로기이다. 민족주의도 다른 가치들과 마찬가지로 악용되거나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족주의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특정의 독선적이고 편협한 관점이 합리적으로 견제됨이 없이 관철되어간 정책결정구조와 대중의 순수한 심성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에게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대개 민족주의와 경쟁관계에 있는 (민족주의를 견제해야만 득세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관이나 이익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편성과 정의를 표방하는 모든 세계관에는 일정한 편견이 수반되어 있기 마련이며, 그리고 그가 실제로 추구하는 현실적 목표는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모든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은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으며, 그들이 민족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치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가 배제와 억압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나, 따지고 보면 모든 이데올로기나 사상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적과 동지를 나누는 일정한 차별과 배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특정의 이해관계를 은폐하기 쉽다.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주장들의 타당성을 살핌에 있어서는, 그들이 입각하는 세계관과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아울러 그에 수반되어 있는 이해관계까지 살펴주어야만 균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필자의 결론은,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입장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부실하거나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민족단위의 공동운명체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 공동체는 신분차별이 배제된 공동체이며, 그 정치공동체(국가)의 주체와 목적이 민족이다. 민족주의는 민족구성원의 평등성을 전제하며, 민족구성원으로 구성된 정치공동체의 주인공이자 정치공동체가 봉사해야할 목적(대상)이 민족이다. 국가는 민족복지를 위한 민족의 기관이며, 민족의 기관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국민주권적 원리를 전제로 하게 된다. 민족주의는 그같은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치운동이기도 한데, 민족주의의 그같은 지향은 현실 속에서 다른 이해관계나 세계관을 가진 다른 많은 사상.운동으로부터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탈민족주의 세계관은 개인주의.계급주의.세계주의.보편주의.국가주의.실용주의.과학주의.사대주의 등 다양하다. 물론 민족주의가 가장 힘겹게 싸운 대상은 자민족을 부당하게 침략하고 괴롭히는 외세였다. 그 외세는 때로는 보편적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지배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탈이데올로기적 언술을 동원하여 민족적 저항을 폄하하기도 한다.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외세로부터의 자주독립-자결권확보나 위상제고 같은 대외적 국면의 것에서부터, 민족적 정체성 강화, 대내적 통일이나 공동운명체적 결속, 국가의 민족화, 복지증진 같은 대내적 목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민족복지를 위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민족주의는 활동의 주된 목표를 바꾸게 될 것이다. 통일 역시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중대가치 중 하나이다. 민족주의에서 통일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계기는, (1) 외세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동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2) 공동복지를 위해 내적 협조체제와 상부상조를 강화해야 할 목적, (3) 흩어져있는 내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배분할 중앙기관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 (4) 그리고 분열로 인하여 야기된 혼란과 안보위기를 수습하고 질서와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 등 다양하다. 그 요구가 절실할수록 통일이라는 과제는 더욱 강하게 고창되고 민족적 염원이나 사명으로까지 부각된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과업은 구성원의 복지에 도움될 때만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는 통일론은 자칫하면 정치적 야심가나 이익을 찾는 집단에 의해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통일의 개념은 구성원들을 하나의 상호의존적이며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로 결속시키고 통합하는 작업 또는 그렇게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 정도로 설정될 수 잇을 것이다. 단일의 국가 밑에 구성원들 모두를 통합하는 단일국가로의 통일은 통일 중에서도 견고한 형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일국가로 통합되지는 않는다 해도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상부상조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라면 그 역시 통일의 또다른 형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어떤 형식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구성원의 복지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성과를 내는가이다. 단일국가로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고 비생산성을 결과한다면, 그것은 좋은 통일이 아니다.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통일은 민족성원의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삼아야 할 것이다. 단일국가통일만이 유일한 통일의 형식이라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3. 통일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좌절

가. 통일민족주의의가 좌절한 원인

한민족은 단일민족국가라는 매우 유리한 조건 속에서 근대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같은 조건은 근대의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데 유리한 동력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구성원들 사이에 '단군의 자손'이라고 표현되기까지 했던 민족적 동질성은 공동운명성에 대한 요구로 나아가서

개인적 이해관계나 취향을 초월한 민족적 결속을 매개하는 구심력 방향의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같은 이점은 해방공간에서 좌우익이 대립하면서 분단과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상황에서는 유효하게 작동되지 않았다. 한민족이 왜 단일민족국가라는 좋은 조건을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나아가고 동족상잔의 참화까지 겪어야 했던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진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한마디로 간추리자면, 분단과 전쟁으로 달려가는 원심력방향의 힘을, 그를 막고자 한 힘이 저지하지 못한 결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더 분석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인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다.

곧, (1) 외세(특히 미국과 소련)의 책동과, (2) 내부에 있던 반통일적 세력의 분단책동, (3) 통일민족주의가 갖고있던 역량의 취약성, (4) 좌우익 리더십의 불모성 등이 그것이다.

(1)은 한반도를 자기 이익에 맞게 질서지우려는 미·소의 책략과 상호대립의 결과로서 분단과 전쟁이 발생한 측면이다. 38선은 한반도를 상대에게 독점시키지 않겠다는 타협안으로 그어졌고, 미국과 소련이 자기의 이익을 한반도에서 관철해간 결과가 두 개 국가로의 분단이었으며, 양국의 패권경쟁은 전쟁으로까지 폭발되었다는 얘기가 되겠다. 한민족은 강대국의 권력정치에 가여운 희생양이 되었고 대리전쟁까지 수행해야 했다는 견해, 그것은 저항민족주의자들이 흔히 전개하는 논리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는 남북에서 활동하던 반통일적 세력들의 분단책동에 초점맞춘 것으로, 민족적 통일정권이 이룩되어 민족정기나 정의 같은 가치가 발언하게 되면 손해를 보거나 불편해지는 세력들이 존재했고, 분단과 전쟁은 그들 반통일세력의 힘과 음모가 작용한 결과였다는 점을 주목한다. 특히 친일·부일의 과거를 가진 세력과, 공산주의-반공산주의에 관념적으로 현실적으로 동조한 세력들이 통일민족주의를 제지하고 분단과 대결을 부추겼던 역사가 중시된다. 친일파는 통일민족주의가 득세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정국을 민족대 반민족의 대립구도로부터 반공대 공산주의의 대립구도로 전환시켜 갔다. 그리하여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부추기고 우익과 좌익의 불신을 조장하면서 좌우익의 대립을 격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종국에는 남쪽에 반공적 분단국가를 세우는데 성공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식 혁명을 보편적 정의로 간주하고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민족국가 건설노선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전쟁의 수단으로 전국토를 공산화하기 위한 반민족적 계획을 강행하였다.

(3)은 통일민족주의가 그 자체로 갖고있던 취약성을 가리키며, 대중차원의 민족의식.정치의식이 미숙했던 것과 엘리뜨 수준에서의 정치력빈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민중은 좌우익 세력의 극단적 선동에 휩쓸었으며, 좌우익 대결이 분단과 전쟁으로 귀결되어 결국 자신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중도진영에서 통일을 설득한 김구나 김규식 같은 통일민족주의 지도자들에게도 그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일정하게 부과해야 할 것이다. 김구가 임정법통론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반탁운동에 몰입한 점이나 좌우합작에 비협조적이었던 것, 남북협상이 실패하고 남한에 단독정부 구성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선거참여를 거부하고 남한국가를 호전적 극우세력이 장악하도록 방치한 점 등은 실책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 큰 책임은 중도파의 순수성을 이용하고 통일노력을 방해한 극단세력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4)는 분단으로 이끌었던 좌우 지도자들이 보여준 반통일적 리더십에 대한 것이다. 극좌.

극우진영의 지도자들은 권력독점에 집착한 나머지 양보와 협조를 거부하고 독선적이고 독점지향적인 행태로 일관하였다. 그는 결국 합작과 통일을 저해하였으며, 분단과 전쟁으로 나가게 하였다. 특히 남북을 장악한 두 지도자, 이승만과 김일성의 반통일적 행태는 지적해야 할 것이다. 두사람은 자신의 구상대로 자신이 중심되어 전국토를 통일하고자 하였으며,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불사하였다. 그런 행태는 분단과 전쟁을 야기하였고, 이후의 오랜 남북대결의 현대사를 만들었다.

이 네 번째의 요인은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만든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이 물어져야 할 요인이라 판단한다. 필자는 설사 외세의 규정력이나 반통일 세력의 책동, 그리고 통일민족주의의 취약성 같은 여러 악조건들이 존재했다 해도, 만약 내부의 정치지도자들이, 마치 전후 오스트리아의 좌우익 지도자들이 보여준 사례처럼 탈진영적-화합지향적으로 움직였다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들 극좌.극우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혼자서 권력을 독점하고 전국토를 자신의 구도대로 통일하고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였다. 단독국가를 건설한 이후 그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덕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에게 큰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승만은 북진통일론을 남발하다가 정작 전황이 불리해지자 시민들은 적치하에 남겨둔 채 가장 먼저 서울을 탈출하였고, 두차례의 개헌을 통하여 자신이 종신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김일성도 정적들을 간첩으로 몰아 숙청하면서 유일체제로 불리는 독재정권을 세워갔고, 자식들에게 권력을 세습시키는 희대의 정치행태를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적 이익과 취향을 뒤로 하고 공적 소명에 헌신하는 도덕성인데,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들 분단국가 지도자들이 이후에 걸어간 행태를 보면, 민족성원들에게 그들이 약속하고 구사한 여러 미사여구들은 단순히 권력장악을 위해 성원들을 속이고 동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다. 민족담론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이비민족주의의 전형적 사례라 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분단국가를 장악한 두 지도자는 북진통일과 민주기기론을 내세우며 크고작은 대립을 지속하다가 종국에는 한국전쟁이라는 대규모의 비극적 사건을 만들게 된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이나 끌다가, 전체 한민족의 6명중 1명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참극을 벌인 끝에 승자없이 '휴전'되었다. 전쟁과정에서 남과 북의 한민족 인명피해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하여, 사망자가 152만명, 부상자가 294만여명, 실종자는 128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한민족을 3천만명으로 보면, 5%가 죽고 10%가 부상당했으며 4%가 실종되어, 그 모두를 합하면 570염만명, 전체 한민족의 19%가 희생된 셈이다. 전국토가 초토화되다시피 하였으니 재산피해 역시 막대하였고, 부모.형제와 떨어져 살게된 이산가족도 1000만명이 발생하였다. 한민족 동족간에 벌어진 이 전쟁에 끼어들어 죽고다친 우방국 병사들 수도 막대하였으니, 남쪽 편에서 싸운 유엔군의 경우 사망 3만5천명, 부상 11만5천명, 실종 1500명이엇고, 북측 편에서 싸운 중공군의 경우도 사망자가 18만4천명, 부상자가 71만5천명, 실종자가 2만1천명에 달하였다.

전쟁은 한민족에게만 불행을 강요한게 아니라 세계인에게도 희생을 강요했다. 그러나 그같은 불행을 초래한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아직 진지하게 추궁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그토록 많은 '동포'가 죽어갔고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전쟁으

로 몰아넣은 '지도자'들은 온전히 살아남아 권좌를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분단체제가 65년간이나 지속되온 원인을 해명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나. 통일선언 속의 민족주의

해방공간에서 통일민족주의가 편협한 세력들과 이기적 지도자들에게 패배한 결과는 단순히 분단과 전쟁을 초래한 데 그치지 않고, 이후 70년의 소모적 대결의 역사로 연결되어 갔다. 통일민족주의를 제압하고 남북의 국가를 장악한 세력들은 국가를 사유화한 가운데 서로에게 존재이유를 제공하면서 분단을 재생산해갔다. 공산-반공산을 선과 악으로 대비시키는 냉전논리를 유포하면서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반대자들을 '적'과 내통한 '간첩'으로 몰아 제거하였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상대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행태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문제는 은폐하고자 하였다.

물론 분단시대를 통해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도가 간헐적으로 전개되기는 했다. 통일은 다수 민족성원의 소망이자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보강해주는 소재였기 때문에 정치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진정성의 유무와 별개로, 통일문제를 거론해야 했다. 물론 그때마다 민족이 호명되었다. 남과 북은 그동안의 남북대화에서 수차 민족대단결과 민족주의 및 동포애의 실천에 입각한 통일노력을 합의했었고, 그때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기도 했었다. 가령 남북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공동선언이었던 1972년의 7.4공동성명에서는 조국통일의 3원칙으로, (1)외세의 간섭이 배제된 자주적 통일과, (2) 상대를 반대하는 무력행사 아닌 평화적 방법, 그리고 (3)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을 제시했었다. 선언에서는 민족을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할 수 있는 가치이자 기제로 상정하면서,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원칙하에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통일은 민족의 활로를 위해 필수적인 민족적 과업이며, 민족적 공동체의식에 기초하여 접근해간다는 기조의 인식은 이후 통일에 대한 남북간 합의문에서 항상 제시되어왔다.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1992.2.19.)의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합의서의 본문에서는 (1) 남북화해, (2) 남북불가침, (3) 남북교류협력 등 3부문의 합의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내용(15조)과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17조)"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합의서에 의하면 남북통일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것이며, 온 겨레가 염원하는 바이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진 남북간 첫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6.15공동선언(2000)에서도 민족은 호명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의 수반이 정상회담을 가졌음을 밝히고, (1)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과,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 등 5개 실천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선언은 통일이 민족의 염원인 만큼, 민족끼리 힘을 합하고 민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뢰를 다지고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민족화합의 원칙은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 사이에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2004)때 발표된 10.4선언에서도 천명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고 말하고,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면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전개한다는 것,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것,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등 8개항의 실천사항을 제시했었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평양공동선언(2018.9.19.)에서도 그러하였다. 이 선언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선언에서는 두 정상이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을 확인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간다는 것과,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간다는 것 등 5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었다.

남북관계에 대한 선언에서 민족이 호명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끌고간 대통령으로 꼽히는 김영삼대통령도 취임사(1993.2.25.)에서는 남북의 정상이 민족이라는 원점에 서서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장래를 풀어갈 것을 촉구했었다.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 가에서도 좋습니다. 거기서 가슴 터놓고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원점

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삼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사실상 통일민족주의자들이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주창하면서 제시하였던 담론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1948년 분단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통일을 위한 최후의 시도로서 남북협상을 제안한 김구가 남북협상을 위해 북행하면서 남긴 성명의 한부분을 인용한다.

“지금 우리는 국토와 인민이 해방된 이 기초위에서 우리의 독립 주권을 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중대한 임무이외다. 우리들이 임무를 달성하자면 오직 3·1대혁명의 민주단결 정신을 계속 발양해야 됩니다. 남북 조선의 동포가 단결해야 하고, 좌파 우파가 단결해야 하고, 남녀노소가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민족 개개인의 혈관속에는 다같이 단군 성조의 聖血이 흐르고 있읍니다. 극소의 친일파 민족반도를 제한 외에 무릇 한국 동포는 마치 한 사람같이 단결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단결이 있은 후에야 우리의 독립주권을 창조할 수 있고 소위 38도선을 물리쳐 없앨 수 있고 친일파 민족반도들을 숙청할 수 있읍니다.”

여기서 김구는 독립주권창조를 위해선 남한 · 북한과, 좌파 · 우파,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단결해야하는 당위성과 또 단결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로서 우리민족 개개인이 모두 ‘단군 성조의 聖血’이 흐르는 한핏줄임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본다. 김구의 이같은 ‘단군의 자손’론은 “철학도 변하고 정치 · 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지만 민족의 혈통은 영원하다”는 관념에로 연결되고, 좌우의 대결조차도 민족이라는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좌 · 우의 세력이 민족의 이름아래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와, 민족의 최고성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어떤 사상 · 세력도 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로 연결돼가고 있다. 남북협상을 위해 북행을 시도하던 김구는 북행을 만류하던 군중들에 대해, “북한의 빨갱이도 김일성이도 다 우리들과 같은 조상의 피와 뼈를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북의 우리 동포들을 뜨겁게 만나봐야 한다”고 하며 설득했었다.

이처럼 통일을 요청하는 자리에서는 민족적 동질성과 공동운명성이 외쳐졌고, 동포애에 기초한 양보와 협동이 촉구되었으며, 사적 이익과 이견을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이 외쳐졌었다. 기왕의 통일운동이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던 사례는 더 찾아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그같은 민족주의적 요구들은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었다. 통일민족주의가 왜 실패하였던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폈는데, 다음에서는 분단체제의 본질과 그것이 70년이상 지속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가 보기로 하다

4.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민족주의

가. 분단체제의 본질과 지속원인

분단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분단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힘이 그를 극복하

고자 하는 힘보다 강대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면 분단상태를 유지-지속시키는 힘의 본질은 무엇인가. 분단의 일차 원인은 외세에게 물어야 한다. 곧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 책임을 두고 38선이라는 관할지역 경계를 설정한 데서 비롯된다. 두 개 국가가 남과 북에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에도 미국과 소련의 역할과 의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었다. 또 남북간의 전쟁에 두 나라가 개입해서 승패 없이 휴전상태에 빠지게 한 것도 미국과 소련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소련은 북한의 전쟁계획을 승인해주었고, 공군과 고문단을 파견했으며,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므로 중국처럼 정식 참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전쟁의 당사자중 하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후에 남북분단이 장기화되고 서로의 갈등이 지속되어 '분단체제'라는 것이 고착된 것의 1차적 책임까지를 미.소에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분단체제가 미소갈등의 산물이자 개입의 결과라면, 한반도에서 미소의 군대가 철수한 시점에는 통일로의 조짐이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미국과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 남북은 오히려 전쟁상태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에 들어 미소냉전체제가 해소-완화되고 데탕트시대로 전환된 이후에도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되었다. 전쟁 일보직전으로까지 긴장상태가 진전된 적이 여러 차례였고, 남쪽에서는 수시로 간첩조작사건이나 매카시즘 선풍이 횡행했었다. 이런 사례들은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세계체제 사이의 연계성이 소멸되었거나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미.소의 관계와 상관없이 남북간의 갈등은 상존했고 고조되기도 했다. 분단체제는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부정하면서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 또는 그같은 분단대립상황이 남북한 내부 및 외부에 있는 여러 요소들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 일상화되는 현상 및 그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분단상황은 남북한의 한민족 성원들에게 인적 물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삶을 구속해왔는데, 이 분단체제가 유지.존속되는 매카니즘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통일의 방안이나 조건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왜 분단상황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여기서는 이 분단체제의 본질과 성격 및 의의와 지속배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분단체제의 본질과 성격 및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여러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 같다.

(1) 분단체제는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달리하고 있는 남북의 두 국가가 민족사적 정통성과 역사적 정의를 독점하고자 대치하며 경합하는 현상이다. (2) 분단체제는 미.소 냉전체제의 산물이자 동아시아에서의 미.일동맹과 중소연합 사이의 대립을 한반도에서 반영하는 하위체제이다. (3) 분단은 미.소의 냉전대결의 결과물로 성립하였지만 분단체제는 남북 내부에 존재하는 분단지향적 요구들과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지속되고 있다. (4) 분단체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남북의 독재권력이 외면적으로는 서로를 적대하는 듯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로에게 존재이유를 제공하며 공존하는 적대적 공생체제이다. (5) 분단체제는 분단과 전쟁에 책임이 있는 남북의 당사자들이 전쟁후에도 남북 국가를 장악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복의지를 관철해가고 있는 대결체제이다. (6) 분단체제는 민족적 합작과 협동을 촉구한 통일민족주의의 순수 열망을 거부한 극좌.극우세력이 남북에 두 개의 분단국가를 건설하여 서로 대립을 이어가는 대결체제이다. (7) 분단체제는 냉전적 분단상황에 이익과 가치관을 함께 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이 연대된 기득권 동맹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8) 분단체제는 안보와 통일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면서 2분법적 매카시즘과 종파논리 및 억압과 배

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냉전보수 세력의 전략이 관철되는 체제이다. (9) 분단체제는 오랜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보면 신라와 발해가 남북에서 대치하던 제1차 남북국시대에 뒤이어 1000년만에 출현한 제2차 남북국시대이다. (10) 분단체제의 남과 북에서는 주도세력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대규모의 역사공정과 정치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반하는 해석은 금지되고 억압되었다.

(11) 분단체제는 민족에 대한 반역이자 배반이고, 민족을 고통에 빠뜨리는 굴레이다.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분단상황을 당연시하고 바람직스럽게 여기는 힘이 그를 타파하고자 하는 힘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상황에서 이득을 보거나 분단상황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분단체제는 분단과 전쟁과정에서 당사자가 되어 싸웠던 세력과 그 후계자들이 남과 북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다. 남과 북의 헤게모니 세력은 정치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논리를 국민일반에 계도하였고, 다수의 구성원들은 그러한 논리를 수용하고 내면화하였다. 헤게모니 세력은 반대자를 억압하고 자원배분에서 배제하였다.

분단은 세계체제 -> 한반도체제 -> 국내체제의 방향으로 영향관계가 형성되었다. 곧 미소의 패권경쟁이 38선을 결과하고 두 개 국가로의 분단을 결과하였으며, 국내의 보수반공우파의 장기집권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분단체제가 공고화된 이후에는 세계체제로부터의 영향은 약화되고 국내체제와 한반도체제의 연계가 공고화되었다. 가령 남북대결과 긴장제고가 국내적으로 보수냉전 권력을 공고화했고, 보수냉전권력은 다시 남북간의 긴장대결국면을 조성하는 등 두 국면이 서로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생산한 것이다. 물론 미국쪽으로부터의 영향, 가령 미국내에서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고 북미관계가 경색되면 남북관계도 따라서 경색되고, 다시 남한내 보수세력의 입지가 강화되는 순서로 연계관계가 전이되는 양상도 없지않았지만, 국제적 요인보다는 한반도-국내정치의 연관관계가 더 강고해졌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 보수냉전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다시 북한의 보수화를 유도하였다. 북한 역시 안보문제를 권력유지에 활용했을 것이다. 가령 내부를 단속하고 권력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면 남북관계를 경색시킴으로써 내부를 긴장시키고 장악력을 키우는 빌미로 삼았을 것이다.

분단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배경과 그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적대적 공생'이나 '국가사유화' 같은 개념이 유용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우선, 분단과 전쟁 이후 70년간의 남북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용어는 '적대적 공생'일 것이다.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은 정치세계에서 자주 찾아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유용하며, 특히 남북관계나 한일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일단은 두 개의 정치주체가 외형적으로는 서로를 적대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에게 존재이유를 제공하면서 대외적 대립국면을 대내적으로 각자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확장하는 데 이용하는 정치전략이나 행태 또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규정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의 미소관계나 국민국가경쟁시대의 국내정치를 설명하는 데도 자주 사용되며, 북한의 극좌세력과 한국내 보수냉전세력, 일본의 극우세력 및 미국의 보수매파 사이에도 적대적 공생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고착되면 두 국가의 내부에는 극단적 강경세력이 안보위기를 재생산하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국가를 사유화해가는 현상이 발생하며, 반대로 국민들은

억압체제 밑에서 안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 분단후 (특히 전쟁후) 남북의 지배세력은 분단과 안보위기를 이용하여 집권을 유지해왔다. 상대를 악마로 규정하는데, 상대의 악마성이 강화될수록 자기의 문제는 감춰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엇고, 상대를 악마로 규탄하는 것의 효과는 국내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발휘되었다.

국가사유화 개념 역시 정치세계 속에서 자주 찾아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유용하지만, 그러나 아직 학술적으로 개념화된 것은 아니다. 국가의 사유화는 공공재인 국가권력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점유하여 사적 이익과 취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상이다. 국가는 국민의 공동복지와 안전·행복을 위한 공적 기관이어야 하며, 국가의 권력은 공적 목표를 수행하는 수단이자 자원으로서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공공재이다. 국가가 사유화되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개인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일상화되며, 공적 영역을 처리하고 관리함에 있어 공과 사의 구분이 없어진다. 동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독선적으로 결정하고 견해를 관철해간다.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을 독점하고 영속화하는 장치를 법규화 하는 단계로 나아가며, 정보통제와 상징조작을 통하여 국민의 의식을 조작하고 저항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개인적 차원의 부정부패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현상의 초보적이고 경미한 차원일 것이다. 권력의 사유화의 극단적이며 교묘한 형태는 법을 동원하는 합법적 사유화이다. 개인적 영구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거나 통치자 개인을 우상화하는 조치들은 국가가 심하게 사유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흔하게 확인되는 현상이며, 심한 경우 북한처럼 자식에게 권력을 세습하기도 한다.

분단후 남과 북의 국가는 권위주의적 독재자에 의해 사실상 사유화되었다. 이익을 같이하는 제방면의 (이를테면, 의회.정당.군부.관계.재계.법조.언론.학술.시민사회까지) 일종의 권력동맹이 폭넓게 권력을 나누어갖고있었다. 남북의 국가와 권력을 사유화한 집단이 그를 유지.강화하는 전략으로 손쉽게 채택한 전략이 적대적 공생이었다. 이 국가사유화 현상은 적대적 공생 현상과 표리의 관계를 이루면서 분단을 재생산하고 민족의 에너지를 소모시켜왔다 할 수 있다. 국가사유화와 적대적 공생의 두 요인은 분단체제의 배후에서 분단체제를 지속해온 장본인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유화된 남북 국가의 지배세력은 분단을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해갔다. 분단체제의 해체는 그를 지탱해온 남북의 권력이 해체되어야만 가능한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 분단체제 해소는 남북의 정치가 민주화되고 분단과 상쟁에 책임이 없는 세력이 두 국가의 권력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변모되어야만 가능해지는 상황이 고착화된 것이다.

나. 분단극복을 위한 민족주의

분단체제가 민족에 주고있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많은 돈이 국방비라는 명목으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출되고 있고, 이 안보비용은 재정을 압박하고 복지를 지체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대북 정보전을 위해 강력한 정보기관이 양성되었고 거이에도 많은ㄴ 비용이 지출되었다. 상대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고 방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통제되

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꽃같은 청춘을 군대에서 '썩혀야' 했다. 군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군의 정치에 대한 발언권도 증대되었다. 군이 쿠데타를 통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사건도 3차례나 발생하였고 오랫동안 군부출신의 대통령들이 권위주의체제를 이어갔다.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고, 많은 권력에 대해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적을 이롭개한다는 이유로 시민적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았다. 심한 경우 고문을 통하여 간첩으로 조작되기도 하였으며, 그같은 사실이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확인되기도 하였다.

분단체제는 개발독재나 권위주의체제와 밀접히 결합되어 돌아갔다. 사상적 다양성은 제지되엇고, 북한=공산주의=악마라는 획일적 등식이 교육현장을 통하여 보급되었다. 파시즘적 억압체제를 목격한 학자들은 단속되기에 앞서 자기검열을 작동하여 창조적 활동을 자제하였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정치적.문화적 의존으로 이어졌고, 여러 영역에서 자주성이 포기되었고, 민족적 자존심에 손상을 주기도 하였다. 분단체제는 보수냉전세력의 지배와 함께 동행하였으며, 보수권력은 매카시즘 전략을 통하여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권력을 유지하였다. 분단체제는 민족성원의 삶을 속박하고 민족의 에너지를 비생산적으로 소모시켜온 굴레와 같은 것이다.

통일은 이같은 고통스런 굴레를 벗어던지는 통로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이야말로 통일을 요구하고 촉진하는 동력이자 명분이 되어왔다 할 수 있다. 통일은 구성원 사이에 공통성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특히 공동의 정체성이나 공동의 이익이 중요하다. 남북의 주민이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다. 물론 세계시민의 일원이기도 하고 저마다 인권을 갖고있는 개개인이기도 하지만, 그같은 정체성은 개인의 공동체생활로부터 너무 먼 곳에 있다. 또 자칫하면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확인되는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간의 통일운동이 민족정체성을 기반으로 삼고 민족주의감정에 호소하였던 것은 통일과제 자체가 민족적 각성 이후 생겨난 민족운동사의 연장선 상에서 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 모두를 동질적 공동체로 통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이자 세계관이 바로 민족주의였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에 공명하여 유명.무명의 숱한 지사와 열사들이 목숨바쳐 투쟁했었다. 그것은 민족이라는 가치와 정체성이 스스로를 헌신할 수 있을만큼 동질감과 공동체의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통일과제는 민족주의적 아젠다이며, 민족주의적 감정과 논리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민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민족은 통일과제로 나아감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정체성이자 이데올로기이다. 역대의 통일운동들이 민족감정에 호소하면서부터 대화와 설득을 시작한 것은, 불가피하면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기도 했었다. 물론 거기에 공동의 이익과 보편적 의미들이 추가될 때 통일운동은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논의하는 장에서는, 민족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민족적 공동운명성을 설득하고, 공동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에 더하여, 공동의 과제를 위해 양보하고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순서로 논의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통일에 기여하는 민족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민족주의는 다양한 목표와 과제를 두고 씨름한다. 우선과제가 다르고, 상황마다 취하는 전략도 다르다. 해방공간의 통일민족주의와는 싸워야 될 대상과 환경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통일과제를 두고 민족

주의가 지향하고 유념해야할 지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민족주의는 무엇보다 70년간 이어온 남북대결과 분단체제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지성이자 상상력으로 재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후의 65년 대결과 상쟁의 역사를 만들어낸 요인들에 대한 반성을 끌어내야 하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적대적 공생을 이어온 실상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기준이자 관점이 되어야 한다. 사적 이익과 취향을 위하여 민족을 이용하고 왜곡한 내역에 대해서도, 그리고 권위주의독재와 권력에 봉사한 내역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민족주의는 단순한 민족정체성이나 자긍심 같은 주제에 매몰되어 역사탐구활동에 머물러선 안되며, 민주주의와 인권, 인도적 보편윤리와 노블레스오블리주, 평화와 통합 그리고 정의 등과 같은 보편가치에 기반하여 그 사상이념적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러한 반성과 보완에 기초해야만 민족주의는 성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는 분단체제에 뿌리내린 권력과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민족 전체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특히 두 개의 국가주의로부터 독립하여, 또 단일국가통일론을 넘어선, 순수한 민족적 공동체를 향한 진정성있는 의지와 행동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분단된 두 개 국가는 자기 국가를 절대화하는 국가이성에 의해 작동돼왔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냉전적 가치를 앞세운 기득권세력의 이해에 봉사하고 있었다. 민족주의는 두 개의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민족을 위한 기획이 되어야 한다. 한국사 속의 단일국가통일론은 민족의 복지에 대한 고려에서가 아니라 권력독점의지와 독선적 정복욕에 이용되어 왔다. 올바른 민족주의에서는 국가는 민족의 기관이자 민족복지를 위한 장치일 때만 의미를 부여받는다. 단일국가통일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될 때는 새로운 상상력이 작동되어야 한다. 두 개의 국가나 구 이상의 분권된 체제도 생각될 수 있다. 민족성원의 복지를 위해 여러 국가모델과 정책에 의해 서로 경쟁하며 자극하는 체제도 좋을 것이다. 단일국가통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여러 단위들이 민족적 동질성에 기반하여 협조하고 상생하는 관계, 민족주의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의 핵심은 그것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민족공동체라는 개념을 다시 떠올리고자 한다. 한민족공동체 개념은 1980년대에 노태우정부가 제기했었다.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에 기초하여 민족적으로 화합하고 평화협조를 축적한 뒤 차츰 단일국가로 나가자는 구상이었다. 그것은 한반도 범위의 통일구상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는 남북한과 750만 전세계 한인사회까지를 망라한 800만 한민족을 멤버로 하는 공동체이다.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하여, 남북한과 세계 동포사회가 공동번영을 위해 서로 돕고 협조하는 상부상조 협조체제 또는 연결망을 가정하고 있다. 그것은 영역국가나 주권국가를 넘어선 다국적적 민족적 네트워크이다. 남북의 두 국가는 한민족공동체의 중요 멤버이자 당사자로 만나고 협조한다. 각개 나라의 주권은 그 국가의 거주민이 결정할 문제이며, 북한을 억지로 통합 또는 흡수하려는 노력은 포기되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는 일단은 남북의 두 개 국가와 다국적 한인사회를 결속시킨 네트워크로서, 민족사무를 관장하는 협의기구 정도를 설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해외동포사회는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매개.촉진.감시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남북의 국가가 좀더 분권화를 진행하게 되면, 이 민족협의기구의 기능이 좀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잇을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아이디어는 안창호 등이 대한인국민회를 만들었을 때 기반하

였던 아이디어의 하나로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는 또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동력이자 덕목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서로 양보하고 협동하며, 이해하고 사랑하고 유무상자하는,.. 동포애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명제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왕의 대결을 넘어 화해하고 용서하며 보듬어주는 동력으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족적 동질성이나 동포애는 그러한 결합의 원리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 좌우합작운동이나 남북협상과정에서 외쳐졌던 논리와 덕성들이 그것이었는데, 동포애와 동질성의 덕이 실제로 작동되는 만큼만 통일과 평화는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는 또 민족공동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역사와 문화 속에서 확인시켜주는 작업에도 나서야 한다. 민족정체성을 탐구하였던 근대이래 민족주의적 지성들이 축적한 연구성과들과 문제의식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단군이라는 상징을 다시 호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전통시대를 통하여 한반도의 주민 모두를 묶어주었던 '동국'(동인.삼한.해동...)이라는 집단의식은 단군을 공동의 출발점으로 하여 성립했었다. 한말이후 한민족이 전근대민족으로부터 근대적 민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이 단군이라는 공동의 시조가 다시 호명되었다. 이 단군은 2002년 남북이 우리 땅안에서 최초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을 때 그때 설정한 주제이기도 했다.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것, 남북 모두를 자긍심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해낼 수 있는 것, 문화와 언어 속에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드러내주고 확신시키는 작업은 민족주의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서구의 민족주의 역시 고유의 공동문화를 드러내는 학술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었다. 최대한의 합리적 지성에 기초하면서 모두를 뜨겁게 결속시켜줄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게 이끌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활동으로의 새로운 국학(한민족학)을 정립하는 과제, 그것도 민족주의가 통일을 위해 담당해야 할 사명이라 하겠다.

분단체제는 민족에 대한 배반이자 반역으로 성립했고 유지되어 왔다. 분단체제를 분식하고 있는 허위의식을 걷어내고 진정한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혁신의 논리, 실천의 동력으로 민족주의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7. 맺음말

2018년에 접어들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 통일민족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대결이 관성화되어 있던 한반도에 해빙과 변화의 조짐이 본격화한 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

첫째로 들 것은 분단과 전쟁 및 이후의 65년 상쟁대결 역사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지도자들이 남과 북의 최고수반 자리에 올랐다는 점이다. 전쟁의 당사자로 서로를 멸망시키기 위해 싸웠던 당사자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평화를 위한 대화를 진정성있게 이어가는 것은 쉽지않을 것이다. 남쪽의 문재인대통령은 냉전보수진영과 싸워 이기고 대통령이 되었다. 남북대화와 햇볕정책을 지지해왔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공약하며 당선되었다. 김정은위원장도, 비록 전쟁과 냉전대결의 주역인 김일성.김정일을 승계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분단과 전쟁 및 대결역사의 1차적 책임에서는 벗어나 있다. 두 지도자는 서로를 적대하며 갈등한 적이 없다. 그만큼 신뢰를 쌓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냉전대결에 책임이 없는 두 지도자는 평화협력.공

동번영시대라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좀더 유연하게 상상력을 발휘해가고 있는 중이다.

둘째로 남쪽에서 촛불혁명의 결과로 보수정권이 퇴진하고 진보적 대통령이 집권한 것도 중대한 환경변화이다. 앞시기 남한정치를 지배해온 세력은 햇볕정책을 거부하고 북한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진하던 보수세력이었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문재인대통령과 여당은, 냉전보수세력의 반대편에서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체제구축을 추구해왔었다. 물론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꾀하면서 여전히 매카시즘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세력이 아직도 제1야당의 자리를 확보하고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고있지만, 그러나 적폐청산과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에 기반하여 구체제세력의 발언권은 크게 위축돼있는 것이 사실이다. 촛불혁명 후 청와대의 주인이 된 문재인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평화의지와 북.미대화를 중재하려는 진정성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는 중대한 동력이 되고 있다.

셋째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대미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한 것과, 새롭게 권좌에 오른 김정은위원장이 경제방면에서 인민들에게 무언가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 역시 우호적 환경의 하나이다. 김정은은 핵.경제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발전과 민생문제 해소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노선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이 국제적 비판과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핵개발에 총력을 집중한 것은 미국 및 남한과의 협상에 활용할 카드를 만들기위함이었다는 얘기이다. 객관적 국력에서 열세에 처해있는 북한지도부는 그 방어심리로 인하여 대화와 개방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핵.미사일개발로 인하여 전력에서 균형을 맞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런 자신감은 미국 및 남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 김정은은 또 인민의 삶을 개선해주어야 할 절박한 요구에 당면하고 있다. 공포를 이용한 통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먹고사는 문제에서 성과를 보여주어야만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김정은은 이제 핵폐기와 경제봉쇄해제를 교환하여 북한의 미래를 새롭게 도모하려 하고있다. 북한의 이같은 사정변화는 한반도의 새로운 정세를 열어가는데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

넷째로,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의 사정도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의 핵폐기를 끌어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미국내에 북한이 악마로 남아있다가 붕괴하기를 원하는 (적대적공생에 익숙한) 냉전수구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하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트럼프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견제하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최고정책결정자가 북미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한반도평화를 위해 우호적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제재를 결의한 유엔의 조치에 동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변수가 되리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보수정권은 북한이 고립되길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북미관계가 해빙되면 그에 맞게 북일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청구권보상금은 북한을 개방과 평화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의미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상황전개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주고 있다. 한반도의 냉전대립을 지탱하던 남북간.북미간의 적대적공생체제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단체제는 세계체제(미소냉전) -> 한반도체제(남북분단과 전쟁) -> 국내체제(국내적 우익정권지속)의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소모적 대결상황을 지속시켜 왔다. 미소냉전이 한반도를 분단시켰고, 분단은 남북갈등을 제고하면서 다시 한국내부에 보수냉전세력의 헤게모니를

공고화시켜주는 순서로 작동해온 것이다. 이제 체제간 영향관계는 국내체제(문재인정부로의 정권교체) -> 남북체제(남북한평화체제) -> 세계체제 (북핵폐기, 세계평화증진)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는 촛불혁명의 결과로 남한에서 냉전보수세력이 후퇴하고 탈냉전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설득으로 북한의 김정은정부도 핵.경제병진노선을 포기하고 핵폐기-경제개발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이제 남북간 대결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면, 동아시아와 지구촌 차원에서 안보위기가 완화되고,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정세변화가 이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변화와 함께 통일민족주의도 다시 부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주역은 일단은 남북평화체제를 위해 분투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지지세력일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도 이 민족사적 과업에 당사자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앞시기에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공생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과 북, 미국과 일본 등 관계 부문에 강고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랜 냉전대결시대를 거치면서 구성원들의 심리와 사회구조 속에 형성되어 있는 관성과 트라우마도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들 앞시기를 주도해왔고 또 그에 길들여진 힘들은 남북관계가 과거로 복귀하길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획책할 것이다. 통일민족주의가 이같은 과거회귀를 추구하는 힘들을 극복하고 자기의 이상을 실현해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단계이다. 지난 시기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통일민족주의는 그를 거부하는 힘들에 압도되어 분단과 전쟁을 막지 못하고 좌절했었다. 냉전대결시대를 통하여 권위주의적 권력에 의해 억압되고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부활을 타진하는 통일민족주의는 정부와 지도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앞시기의 통일민족주의가 권력에 의해 규정되고 이용되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다.

지금 분단과 전쟁후 70년만에 활성화되고 있는 통일민족주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갈등과 전쟁과 소모적 대결이 없는 세상, 적대적 공생과 매카시즘이 통하지 않는 나라, 공적 장치여야 할 국가가 사유화되거나 특수이익에 의해 이용되지 않는 나라, 진실이 숨쉬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언하며 인도적 윤리와 노블레스오블리주가 실천되는 세상, 그리하여 평화와 통합과 정의가 이룩되는 세상, 그런 방향으로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역량이 제약없이 꽃피우면서 인류역사에 기여하는 그런 시대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민족주의는 그같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상상력으로 그 내용이 다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는 지금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당위성이자 가능성의 근거로 부상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분단과 전쟁 및 70년간의 남북대결 역사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지성이자 의지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분단체제에 뿌리내린 권력과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특히 두 개의 국가주의로부터 독립하여, 또 단일국가통일론을 넘어선, 순수한 민족적 공동체를 향한 진정성있는 의지와 행동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앞 시기에 민족분단과 내쟁을 막고자 분투했던 통일민족주의의 경험은 중요한 교훈과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018년 연례합동학술회의

세션 1 〈발표 2〉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국 시민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지향

박상필

(한국NGO학회 회장)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국 시민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지향

박상필(한국NGO학회 회장/
성공회대 NGO대학원)

I. 머리말

137억 년 전 빅뱅(big bang)에 의한 우리 우주의 탄생,* 그리고 46억 년 전 성운설에 기초한 지구의 탄생 이후, 35억 년 전 지구에 최초의 생명인 박테리아가 등장하였다.† 박테리아는 단세포에서 다세포 동물로 진화하여 포유류로 발전하였고, 포유류는 인류의 간접적 조상인 유인원으로 진화하였다. 유인원에서 인류의 직접적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가 지금으로부터 약 160만 년 전인 신생대 제4기 홍적세에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뇌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이다. 최초의 인류는 주로 동아프리카에서 생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후 인류는 유럽을 지나 아시아, 아메리카 등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였다. 즉, 우리가 현생인류를 황인종(몽골인종), 흑인종, 백인종(코카서스인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후천적인 기후에 의해 영향을 받은 피부색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공동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인류는 지리적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서로 교류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혼혈종이 생겨났다.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공동의 언어·종교·생활양식 등을 토대로 하여 민족을 형성하고, 이를 단위로 하여 정체공동체를 형성한 것은 근대 이후이다. 고대사회에서 남유럽, 동아시아, 서아시아 등에 제국이 등장하여 법과 규칙에 따라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기도 했지만, 사실 인류는 오랫동안 국가 없이 생활해왔다. 우리가 흔히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근대국가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근대국가는 국민국가(nation state)를 말하고, 이것은 서구사회에서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falen)에 의해 탄생했다. 국민국가는 주로 민족을 단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민족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족국가는 17세기 이후 유럽의 강대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타민족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주체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 점령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대결에서 나타난 경쟁의 주체나 반식민지 저항을 벌인 피식민지 주민의 대항주체이기도 했다. 21세기 지금

---

* 여기서 우리 우주라고 표현한 것은 최근 다중우주론을 반영한 것이다.

† 지구상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과학의 물질기원과 기독교의 천지창조설 혹은 지적설계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서는 1920년대 러시아의 과학자 오파린(Alexander Oparin)이 제시한 분자진화(Molecular evolution) 이론 이후, 20세기 말 프리고진(Ilya Prigogine)이나 얀치(Erich Jantsch)와 같은 과학자들이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이론에서 물질에서 생명이 진화할 수 있다고 보는 과학에 근거하였다(Oparin, 2003; Jantsch, 1989; Prigogine and Stengers, 1994).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에너지원,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원자, 분자들이 떠다니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액체용매, 그리고 충분한 시간 등 4가지를 들고 있다(Tyson and Goldsmith, 2005: 293).

‡ 한때 인종우생학이 서구사회를 휩쓸기도 했다. 유전학적으로 백인이 흑인보다 우등하기 때문에 노예제도 같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전적으로는 백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보다는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 사이의 차이가 더 작다.

에도 민족은 여전히 특정 국가나 지역 구성원의 중요한 정체성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정보화의 확장으로 상호 교류가 증대하고, 다양한 형식의 국가연합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족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입장이다.

한국에서 국가형성은 서구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늦게 이루어졌지만, 20세기 초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반식민지 투쟁에서 민족은 문화적 동질성의 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주체이자 이념이었다. 자기자신과 가족을 초월하여 민족의 해방과 안위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념에 대한 신념 때문이었다. 이후 일본식민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고 근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한민족에게 공동의 가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국가 구성원의 공동의 가치 혹은 지향은 흔히 '민족중흥'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은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도 나타나는데, 주로 반미 자주화를 주장하는 진영에서 민족은 남한과 북한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주둔과 내정간섭에 대한 대항전선의 이념이 되었다. 물론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민족은 공동의 역사와 가치를 수호하는 구성체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선진국의 경제영토 확장과 동일시되면서 한국에서도 반세계화의 이념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에서는 탈민족주의를 유도하거나 부추기는 여러 현상이 나타났다. 먼저 1987년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을 들 수 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각종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시민사회가 발달하게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는 초기에는 국가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여 국내활동에 치중했으나, 세계화의 진행과 정보사회의 발달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 교류와 연대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에서"라는 슬로건처럼, 비록 행동은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공통과제뿐만 아니라 일국의 사회문제도 세계적 차원에서 바라보았다. 사실 시민사회는 근대 탄생과정에서는 일국주의에 기초했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은 세계적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시민사회에서 민족주의는 마치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파괴처럼 극복하거나 지양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시민사회의 성장 외에도 탈민족주의와 관련된 여러 상황이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여 년 간 주로 농촌지역의 남성이 아시아 각국의 여성과 결혼하면서 소위 다문화라고 하는 혼혈가족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혼혈인이 많이 생겨나 오랫동안 유지해온 단일민족의 순혈주의가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농촌지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한다.* 또한 농촌이나 중소기업에서 부족한 인력을 외국 노동자가 대체하게 되면서, 한민족의 전통에 기반한 문화를 넘는 문화다원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외국 노동자가 아니라도 관광이나 방문을 통해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한국인이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오늘날 한국은 백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탈민족주의에 대항하여 민족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

* 예를 들어, 경남 하동군 2018년 초등학교 입학생의 17.8%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였다(경남도민신문, 2018년 1월 25일).

서 감지되고 있다. 제주도에 대규모로 유입된 예맨인을 난민으로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다. 사실 난민의 수용은 시민사회의 가치인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 예상외의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가 당황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 간에 정상회담의 개최와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족은 다시 중요한 이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남북한의 국민이 전쟁과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미관계의 결속만큼이나 남북 간의 상호호혜도 중요하다. 이때 남북 간의 신뢰구축과 상호호혜를 증진하기 위한 이념적 고리가 바로 민족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민족 공통의 정서나 운명공동체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각종 단체의 이념이나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남북 간 긴장완화와 화해를 다르게 해석한다. 앞으로 전개될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궁극적인 지향점인 통일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는 상호 충돌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 글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화해, 그리고 한민족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일을 둘러싼 한국 시민사회 내의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그리고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유용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보적 가치와 세계시민주의의 이념이 남북 간의 상호 이해, 평화의 정착, 통일의 성취,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등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장기간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의 상호대결의 종식,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 국민의 화학적 결합 등은 국가 혹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심지어 그것을 국가에만 맡겨두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다.† 특히 시민사회가 세계시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통일에 따르는 다양한 갈등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남북교류, 통일, 통일 이후의 과정에 수반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II. 시민사회의 일국주의 및 세계시민주의적 속성

1. 근대 시민사회의 탄생과 일국주의

시민사회는 시기와 국가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학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반틸(Jon Van Til)은 시민사회를 “놀이용 점

---

* 2018년 10월에 대부분의 예맨인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에서는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난민을 비롯하여 외부인에 대한 관용은 국가의 신뢰도나 품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박상필 · 유용원, 2012: 127).

†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또한 국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도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경험주의, 법실증주의는 정부가 국가의 핵심이거나 국가의 의지를 실행한다고 본다(박상필, 2010: 205-206). 그러나 정부를 초월하는 존재로서 국가를 설정하고 자체의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헬드(David Hele)는 국가가 스스로 축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Held, 1996: 111-12), 가라타니(柄谷行人)는 국가가 정부나 국민과는 별개의 의지를 가지고 존속한다고 보았다(柄谷行人, 2007: 123-25). 국가는 언제나 감시받고 견제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토"(play-dough)에 비유하기도 하였다(Van Til, 2000: 15). 사실 시민사회는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과 시각에서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 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사이, 혹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자발적 결사체의 문화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박상필, 2011: 103-105).

사실 시민사회의 연원을 따져보면 기원적 20-10세기 문자의 발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문자의 발견을 통해 인지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사회구성원은 공동의 신화를 만들어 상호 믿음을 확보함으로써 집단을 구성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Harari, 2015: 42-49). 이러한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집단생활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확보와 대외적 위협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말하는 공동체의 윤리 형성, 상호 간의 교류와 무역, 예술적 활동, 영성의 발현을 위한 수행 등이 있었을 것이다(박상필·배성환, 2017: 7).* 시민사회의 연원은 문헌상에서 볼 때도 오래 전의 문헌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치학〉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의 계획적이고 인공적인 국가론에 반대하여 국가와 개인 사이에 각종 중간조직을 상정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 중국의 맹자(孟子)도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자기완성을 위해 선(善)의 확충을 강조했는데, 그의 민본사상에서 본다면 이것은 숲속 은둔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때 일상에서 수행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결사체가 존재했을 것이고,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박상필, 2010: 292).

그럼에도 시민사회는 근대적인 개념이며, 지극히 근대적인 현상이다. 서구의 근대는 16-17세기의 종교개혁, 그리고 17-18세기의 계몽주의의 확산을 통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제도와 삶의 방식을 추구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세의 전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 핵심이었다. 근대에서 자유시장에 기초하는 자본주의가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국가가 없는 자연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권위적 조정체계로서 국민국가가 등장하였다(박상필, 2010: 294). 그러나 국민국가의 초기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었다. 서구사회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절대체제가 유지되었다. 사실 근대초기 절대체제는 상업자본가와 자영농민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富)를 축적하고 더 많은 축적에 관심을 가졌던 개인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의 횡포와 간섭에 저항하였다. 바로 절대체제에 대항한 정치개혁과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배경이다. 국가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국가 바깥에 다양한 노동조합, 직업조직, 문화단체, 지역공동체 등이 생겨났고,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언론매체도 출판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카페나 살롱에 모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박상필·배성환, 2017: 8-9). 즉, 시민사회의 핵심인 결사체, 결사체 간의 네트워크, 다양한 공론장, 국가에 대한 저항이 생겨난 것이다. 바로 근대 시민사회가 등장하는 계기이다.

근대 시민사회는 자유주의 이념을 반영하여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이념은 17세기 로크(John Locke)의 인민혁명론, 18세기 아

*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하라리(Yuval Harari)는 인류 초기의 집단생활과 상호협력이 직립인간의 탄생으로 인한 여성의 엉덩이 축소, 출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미숙아의 생산, 식량확보를 위한 공동 육아 등으로 설명한다(Harari, 2015: 28-29).

담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시장론과 퍼거슨(Adam Ferguson)의 국가견제론에서 잘 나타난다. 물론 국가에 대항하고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민사회의 이념은 19세기와 20세기에도 계속된다. 19세기 산업사회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여러 형태로 억압을 받았고, 보편적인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초점이었다(Seligman, 1992: 101-107).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서구 선진국이 개인의 평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이나 동유럽에서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심지어 1970년대의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 일어난 독재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민주화 투쟁도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내포한다(박상필·배성환, 2017: 9-10). 이처럼 시민사회는 근대 초기 등장시기부터 시작하여 20세기 후반까지도 일국주의에 기초하였다. 국민국가 내에서 국가권력에 저항하고 개인의 자유를 주창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물론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미국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9세기 초반 미국의 건국 초기에 종교단체와 자선단체를 비롯하여 시민사회(타운)의 각종 결사체가 국가가 제공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심지어 시민사회는 교육, 의료, 자선은 말할 것도 없고, 치안이나 소방과 같이 오늘날 주로 국가가 담당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Tocqueville, 1997).* 이러한 현상은 미국적인 현상만이 아니었고 유럽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공공서비스 생산 역할 또한 기본적으로 일국주의에 기초한 것임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국 시민사회가 언제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박상필, 2003: 122-26). 구한말 동학혁명의 시점, 20세기 초 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 1945년 해방 이후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결사체의 활동, 1960년대의 4월혁명과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 1987년 6월항쟁 등을 각각 시민사회 형성시기로 본다. 그러나 1960년대 초기 형성단계를 거쳐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박상필, 2011: 111-14). 이렇게 본다면, 초기 1960년대의 형성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 1987년 6월항쟁 이후에도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민주화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였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시민사회 또한 그 등장 시기부터 일국주의에 기초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활발해진 각종 공공서비스의 생산 또한 기본적으로는 일국주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시민사회의 일국주의가 반드시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국가 내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시민사회의 발달과 세계시민주의의 등장

1960년대 서구사회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기였다. 일부 학자들은 지금의 미국이나 유럽도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의 풍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

* 이처럼 시민사회가 자원을 동원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체제를 능동사회(active society)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박상필(2007) 참조.

†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세계적 교류와 연대가 전개되었고, 행동에서도 다양한 국제원조활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일국주의 성격이 강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의해 생활의 풍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이 세상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평화는 1960년대 말에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면서 깨지기 시작하였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구사회에서 발생한 68혁명은 기존의 사회체계와 권위주의에 저항하여 전쟁 또는 체제붕괴 직전 상황까지 갔다. 이러한 혼란은 곧 잠잠해졌으나, 1970년대 이후 또 다른 변화인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으로 이어졌다. 신사회운동은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의 지적처럼, 경제적 성장에 따른 탈물질적 가치 추구와 관련이 있지만(Inglehart, 1977),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의 근대적 체제에 대한 후산업사회의 문화적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지적처럼, 체계의 생활세계(life world) 침투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Habermas, 2006)

물론 신사회운동은 기존의 구사회운동이었던 노동운동의 계급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대안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박상필, 2011: 283-84). 따라서 환경, 평화, 인권, 여성권리, 소비자권리, 문화적 정체성 등과 관련된 각종 개인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권리는 일국적인 현상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이념으로서 당연히 국가적 경계나 민족의 단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으로 파급되었고, 각종 이슈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연대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신사회운동의 이러한 성격과 행동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환경개발회의 이후 각종 국제NGO회의에서 잘 드러난다. 리우 환경회의는 유엔의 환경개발회의(UNCED)에 대응한 일종의 병행회의(parallel conference)였지만, 다보스포럼을 비롯하여 경제적 강자에 대한 국제적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연대와 저항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잠재한 반면, 세계시민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세계시민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신사회운동은 세계화의 국면에서 더욱 국제적 교류와 연대가 확장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라고 지칭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에 의해 전지구적 자유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경제적 현상을 일컫는다. 일종의 전세계적 자본주의의 구조화 현상으로서 경제의 세계화, 그 중에서도 금융의 세계화가 핵심이다(박상필, 2011: 352).* 그러나 세계화는 “상호의존의 가속화”(Ohmae, 1995), “시공간의 원격화”(Giddens, 1991), “시공간의 압축”(Harvey, 1997)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제나 금융의 확장을 넘어 지역 간 상호작용, 상호교류,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전 영역에서 하나의 지구촌이 형성되고 지구적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이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이다(박상필, 2011: 353-54).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고립주의가 일종의 반세계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내포된 자유시장의 확대, 특히 강대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 이념은 세계 시민사회의 저항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시민주의가 부각되고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경계로 하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융합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공통의 문제를 서

* 자유시장에 초점을 둔 세계화 현상은 1980년대 이전에도 16-17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그리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구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하였다(박상필, 2010: 208).

로 협력하여 함께 해결하려는 의식을 내포한다. 심지어 세계적 차원의 정부 구성과 민주주의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고, 일국의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윤리를 정립하자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헬드(David Held)와 그의 동료들은 주권의 공동출자와 유엔의 민주화를 통한 세계민주주의(cosmopolitan democracy)의 실현을 주창하고(Held, et al., 2002), 가라타니(柄谷行人)는 일국의 도덕적 수준을 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윤리'를 강조하기도 하였다(가라타니, 2001). 세계화는 문화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시민운동이 일어나 상호 교류하고 연대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상호 거래하는 속에서도 세계시민의 정체성을 추동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기업가는 한 국가에 소속되어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세계를 무대로 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가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나 사회적 기여를 하는 행위에서도 세계시민의 정체성이 투입되어 있다.

정보화는 세계화와 다른 근원에서 출발하여 작용하고 있지만, 사실 세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계화가 정보화에 의해 확대되고 있는 있지만, 정보화가 세계화에 의해 추동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보화는 토플러(Alvin Toffler)가 '제3의 물결'이라고 지칭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식혁명에 기초하는 것이지만(Toffler, 1988), 오늘날 그 현상은 토플러가 예언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정보화는 정보기술에 기초하여 정보의 생산과 교류가 증대하고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화가 만연한 사회를 일컫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와 관련된 산업이 번창하고 정보관련 서비스가 늘어나게 된다. 정보화는 컴퓨터 혹은 모바일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인간의 사고와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딩(clouding),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이보그(cyborg)가 등장하고 있듯이, 그야말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심지어 인간 종족의 보존 방식까지 바꿔놓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가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점과 함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세계시민의 정체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정보가 위성을 매개로 하여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각종 장치(device)를 통해 상호 밀접한 소통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경을 넘어 인간 상호 간에 정보를 교류하는 E-메일, 홈페이지, 블로그, 밴드,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각종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platform)이 있고,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활발하게 정보를 생산, 전송, 교환하고 있다.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의 민족보다는 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문화를 향유한다. 이에 더하여 교통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 상호 방문하고 교류하는 기회도 늘어났다. 이러한 교류에서도 민족주의는 점점 쇠퇴하는 반면,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

*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 컴퓨팅(quantum computing) 등으로 규정짓는다(Schwab, 2016: 10-11).

III. 한국 시민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지향

1. 한국 시민사회의 진보·보수 간의 대결

한국 시민사회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의 대척점에서 국가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고 성장하였다. 한국이 비교적 시민사회가 늦게 형성되었음에도 국가를 견제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주창활동(advocacy)이 활발한 것도 시민사회의 이러한 형성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7년 이후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부에서는 시민사회 내의 진보·보수 간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다. 이때에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하여 몇몇 주창활동 단체가 강력하게 정부의 민주화 및 개혁을 주도하는 입장이어서 그 영향력이 매우 강력했던 시기였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당(민주자유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시민사회의 각종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박상필, 2001: 223-50).*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특히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둘러싸고 갈등이 촉발하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쌍방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박상필, 2012).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율·참여·연대와 같은 가치를 중시한다. 즉, 시민사회는 자발적 결사체들이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공의 가치와 문화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래서 사회의식이 생성되고, 문화전수가 이루어지며,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사실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세력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과 연대의 규범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과 경쟁이 함께 하고, 공익과 사익이 대결하며, 저항과 포섭이 공존하는 곳이다. 사실 시민사회는 대립·분열·갈등이 상존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박상필, 2011: 105).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세력이 대결하고 갈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렇게 본다면, 시민사회에서 진보·보수의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자유주의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역동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민사회가 가진 다차원적 대결 및 갈등의 전선을 고려한다면, 한국 시민사회는 유독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심각하고, 진보·보수 세력 간의 조화와 융합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은 한국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진보와 보수의 주장이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특징과 다르다는 것이다. 즉, 민족주의의 성격이 강한 보수는 오히려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고 외국인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다. 그런가 하면, 세계시민주의의 특징을 가진 진보는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다.‡ 한편 보수적

† 스마트폰에서 언어의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연되고 있다. 즉석에서 통역이나 번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세계적 교류와 세계시민의 정체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이러한 입장 때문에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 포섭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논쟁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상필(2001) 참조.

† 지금도 매주 주말이면 서울의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허구와 석방을 위한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크게 늘었다.* 물론 현 시점에서 각종 국제개발원조 활동을 벌이는 NGO는 사실 크게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원조 NGO가 세계시민주의를 강조하는 진보단체가 우위에 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주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남북 간의 분단·전쟁·대결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한국 시민사회의 진보·보수 간의 갈등이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보수는 남북 간의 협력과 평화에 대해 비판적이고, 진보는 우호적인 편이다. 북한의 핵폐기를 통해 남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보도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호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진보 이데올로기에 친화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동족 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통일을 가정한 경로라면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이고, 굳이 구분한다면 보수에 친화적이다. 사실 남한과 북한 간의 국력의 차이는 엄청나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한은 북한에 비해 인구는 약 2배,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약 50배, 개인소득은 약 30배, 무역량은 약 200배 크다. 심지어 군사비도 약 4배 많다(박상필·유용원, 2012: 151-52). 즉, 남한은 남북관계에서 볼 때 큰 형님에 해당한다. 한국적 정서에서 부자인 큰 형님은 언제나 관용을 가지고 인자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실 보수적인 사람이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지원에 대해 보수주의자는 매우 비판적이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국 시민사회의 진보·보수 간의 갈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과 통일 이후의 통합에서도 나타날 여지가 높다. 세상에는 기적과 같은 현상이 있듯이,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 그러나 독일통일도 사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며, 남북통일은 또 독일통일과도 다르다. 따라서 부단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북한의 핵폐기, 개방, 경제성장, 체제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주장에 대해 관용정신을 가지고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세력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정치체제를 선택하려고 할 때, 보수세력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통일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과정에서도 남한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때 과연 부담을 많이 지게 될 부자들은 북한 주민을 도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가 의문이다. 물론 남북이 화해하여 활발하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남한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보수세력이 통일과 관련된 이

‡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미국이 일정 정도 지원하거나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반미에 대한 성향이 상당히 누그러졌다.

*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 중 순위변동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2011년 24개국 중 22위, 2016년 28개국 중 25회(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유럽연합 제외)였다. 그러나 지원총액과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비율은 2011년에는 0.12%로 13억 달러, 2016년에는 0.14%로 19억6천만 달러로 늘었다(박상필·유용원, 2012: 138-39; 2017: 172-73). 노무현 정부의 말기인 2007년에는 약 7억 달러로 GNI의 0.07%를 차지하였다.

데올로기나 비용에서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완화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통일을 둘러싼 보수의 거부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2. 남북관계에 대한 민족주의의 한계와 세계시민주의의 유용성

남북 간의 화해, 통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가정할 때, 한국 시민사회가 어떤 이념 지향을 가지고 통일을 대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전후의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상대에 대해 관용을 가지고 양보를 하고 자기 헌신을 유도하는 이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타인도 이웃을 달리 대하듯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타인 중에서도 더 따뜻한 시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통일된 국가에서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취약한 타인에 대해 양보하고 지원하는 것을 일종의 숙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유행하던 1세기 전, 아니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숙명적인 공동체로 여겼고, 같은 민족인 타인을 위한 희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지적하듯이, 사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Anderson, 2002).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민족국가 내에서 사람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하면서 타민족을 증오하고 심지어 테러와 살상을 정당화하는 것은 역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대량학살은 히틀러의 광적인 편견에서 시작되었지만,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을 믿었던 독일인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때 타민족은 하나의 국가 내에서는 곧 타자로 치환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하고 통일 이후 한민족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자윤리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자윤리란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Jean-Paul Sartre)와 레비나스(Emmanuel Levinas)가 말하듯이, 자아라는 주체가 근본적으로 타자의 등장과 개입에 의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서 시작한다(Sartre, 1989, 1990; Levinas, 1996). 그리고 타자를 보편적 총체가 아니라 각자 고유성을 지닌 개인으로 바라보고, 일정한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한다. 윤리적 책임도 여러 가지가 있다. 상호주의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무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결핍을 가진 자아를 완성으로 이끄는 원천으로 바라보거나, 인간이 가진 신성(神性)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무한적 책임도 있다. 또한 타자윤리는 누구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평등주의의 관점을 유지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더 많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회정의를 강조한다. 나아가 타자윤리는 관념이 아니라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실과 유리된 이념은 실제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아만과 편견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이다(박상필, 2010: 73-83).

이렇게 본다면 민족주의는 타자윤리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민족주의는 일정한 울타리 안의 사람을 나와 동질적인 사람으로 대하기는 하지만, 그 울타리 바깥의 사람을 타자로 바라보고, 심지어 그들을 고유성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총체적 집단으로 보는 특성이 있다.*

* 홀로코스트(Holocaust)의 비극에서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난다. 홀로코스트에서 나치는 유대인 개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대인을 상정하여 학살을 자행하였다.

특히 민족주의는 구성원의 동질성이나 자민족의 우월성에 초점을 두는 반면, 그 속의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윤리와는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민족이 상상 속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실제보다는 관념에 가깝다. 즉, 타자를 향한 행동이 실천으로 이어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민족주의가 현실에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그 속에 내포된 이러한 결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족주의는 인종주의나 전체주의와 결부되어 타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역사의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특정한 민족을 상정하는 것은 다른 민족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중심주의와 연결되어 배타주의를 잉태할 수 있다. 배타주의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판단을 자신의 몫으로 여기기 때문에 타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데 인색하다. 심지어 타자를 고려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전과 자존을 위해 타자를 문제 있는 집단으로 낙인찍어 억압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류역사 속에서도 무수하게 찾아볼 수 있다.*

민족주의에 타자윤리가 빈곤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해 타자를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윤리적 책임을 갖는 윤리의식의 생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민족주의 이념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북한주민에 대해 양보를 하고 지원을 하는 행동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 이후에도 민족주의는 공공자원을 배분하고 개인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위해 자신을 양보하는 행동과 연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통일된 상태에서는 타민족을 상정하는 민족적 동질성이 크게 의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족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의 정치공동체 안의 자아와 타자의 문제이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똘레랑스(tolérance)와 같은 진정한 관용은 민족적 동질성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윤리의식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반면에 세계시민주의는 세계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가정한다. 세계시민주의에서 지구촌이나 인류애를 말하는 것도 국가 간의 경계가 없는 세계공동체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주의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언어·인종·종교·생활양식의 차이를 인정한다. 따라서 자신의 외부에 있는 사람을 총체로 보지 않고 고유한 독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다. 개인을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권의 출발이다. 개인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인권의식이 싹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길 수 없고, 자민족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월의식도 갖지 않는다. 우월의식을 갖지 않으면 차별을 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국경이나 민족과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연대의식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연대의식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속성도 강하다. 기부금을 모아 원조활동을 하는 각종 시민사회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는 가라타니의 지적처럼, 일국의 도덕적 수준을 넘어선다(가라타니, 2001). 즉, 나와 이웃도 아니고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윤리의식을 갖는다. 이것은 타자윤리에서 상호주의 차원을 넘어서는 특징을 지닌다. 오히려 원조를 타인에 대한 윤리적 책임, 나아가 자신의 결

* 예를 들어, 15세기에 유럽에서 매독이 휩쓸기 시작했을 때 영국인들은 프랑스의 천연두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183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콜레라가 대규모로 유행했을 때 중간층과 상층은 콜레라를 불결하고 가난하며 음주와 연관이 있는 아시아 하층민의 이미지와 동일시하였다. 1920년대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의 소아마비 장애가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소아마비가 유대인과 이탈리아 이민자의 더러운 생활습관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1960년대 미국 하와이에서 나병이 발생했을 때 서양인들은 중국인을 서양문명의 중심부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Joffe, 2002: 56-57).

핍을 보완하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물론 인간존엄에 기초하여 타자를 지원하는 현자(賢者)나 성인(聖人)과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한 사람의 출현과 실천도 세계시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민족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자윤리가 강하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호혜, 양보, 관용 등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고 실천하기가 쉽다. 통일을 위한 정치체제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중간적인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타협에 이르기가 쉽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서도 세계시민주주의는 상대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지원하고 각종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데 적극적일 수 있다. 통일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일어날 상이한 역사인식,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등과 같은 문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대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봉사와 헌신은 타자를 존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그 인격에 대한 지원을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것으로 바라보는 세계시민주의 이념에서 발원할 수 있다.

세계시민주의가 통일에 또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통일이란 우리가 외치고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면 통일성취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주변국들의 동의와 협력이었다. 유럽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이었던 독일이 유럽의 중앙에 강력한 통일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듯이, 한반도의 주변국 또한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가 외교관계를 통해 해갈 수 있다. 그러나 한류문화가 아시아 국가들에 친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국가 간의 우호나 신뢰는 시민사회에서 각종 교류, 연대, 지원 활동을 통해 의해 증진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국제원조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인적 교류나 시민사회의 연대도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민족주의보다는 세계시민주의와 결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시민주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에도 유용할 수 있다.*

Ⅳ. 맺음말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의 성취, 그리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실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국가가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되는 여러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국가 정책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수하게 돌출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도정에는 무수한 갈등과 충돌 속에서 인내해야만 하는 문제도 많다. 따라서 시민사회도 자체에서 통일을 가정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는 이러한 통일문제에 대해 내부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는 공론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진보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박상필·유용원(2012) 제9장과 박상필·배성환(2017) 제7장 참조.

와 보수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두고 상호 갈등하고 대결하는 상태에 있다. 또한 통일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각각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상호 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통일과 관련하여 보수와 민족주의 이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세계시민주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대해 보수보다는 진보의 입장이 보다 관용적이고, 민족주의보다는 세계시민주의가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보다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통일 이후의 과정은 단지 “우리 민족끼리,” 혹은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선언으로는 무수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계시민주의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에서 타자윤리에 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 물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시민주주의의 유용성은 한반도 내의 상황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세계 차원에서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여론을 확보하는 데도 일정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세계시민주의가 이념적으로 남북통일의 과정에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주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가치를 수용하여 상호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통일과 관련하여 세계시민주의가 이념적으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 내에서의 이념적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세력 및 민족주의에 대해 관용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다양성을 강조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시민정신에 기초한 관점과 실천은 한국이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통합의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 동아시아에 싹트고 있는 새로운 세계문명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남도민신문(2018년 1월 25일).

박상필(2001).『NGO와 현대사회』. 서울: 아르케.

_____(2003).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 조효제(편).『아시아의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95-135. 서울: 한울출판사.

_____(2007). “능동사회의 구축과 시민사회의 재구성.”『한국비영리연구』, 6(1): 3-38.

_____(2010).『국가 시장 비판: 자기완성 원천으로서의 시민사회 재발견』. 서울: 한울출판사.

_____(2011).『NGO학: 자율 참여 연대의 동학』(개정판). 홍천: 아르케.

_____(2012). “199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기억과전망』, 제27호: 162-91.

_____(2017). “시민주권시대 시민의 정체성과 주권의 재편.”『NGO연구』, 12(1): 41-76.

박상필 · 유용원(2012).『한국 시민사회 프로젝트』. 파주: 한울.

박상필 · 배성환(2017).『한국 시민사회 그랜드 디자인』. 서울: 조명출판사.

柄谷行人(2001).『윤리 21』, 송태욱(역). 서울: 사회평론; 倫理 21. 東京: 平凡社, 2000.

_____(2007).『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역). 서울: 도서출판 비; 世界共和國へ. 東京: 岩波 書店, 2006.

Anderson, Benedict(2002).『상상의 공동체』, 윤형숙(역). 서울: 나남출판;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1991.

Ferguson, Adam(1996). Ferguson: An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edited by Fania Oz-Salzberger).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Giddens, Anthony(1991).『포스트 모더니티』, 이윤희 · 이현희(공역). 서울: 민영사;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Habermas, Jurgen(2006).『의사소통행위 이론 I, II』, 장춘익(역). 서울: 나남출판;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 II(Translated by T. McCathy). Boston: Beacon Press, 1984.

Harari, Yuval(2015).『사피엔스』, 조현욱(역). 서울: 김영사; Sapiens. New York: Ian Fletcher, 2011.

Harvey, David(1997).『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 박영민(공역). 서울: 한울;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asil Blackwell, 1989.

Held, David(1996).『정치이론과 현대국가』, 안외순(역). 서울: 학문과사상사;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Held, David, et al.(2002).『전지구적 변환』, 조효제(역). 서울: 창작과비평사; Global Transformations. New York: Blackwell Publishers, 1999.

Inglehart, Ronald(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Jantsch, Erich(1989).『자기조직하는 우주』. 홍동선(역), 서울: 범양사; The Self-Organizing Universe. New York: Pergamon Press, 1980.
Joffe, Héléne(2002).『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박종연·박해광(공역). 서울: 한울; Risk and 'the O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Levinas, Emmanuel(1996).『시간과 타자』, 강영안(역). 서울: 문예출판사; Le Temps et L'autre. Paris: Fata Morgana, 1979.
Ohmae, Kenichi(1995). The End of the Nation State: The Rise of Regional Economies. New York: Free Press.
Oparin, Alexander(2003). Origin of Lif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Prigogine, Ilya and Stengers, Isabelle(1994).『혼돈속의 질서』, 유기풍(역). 서울: 민음사; Order out of Chaos. 1984.
Sartre, Jean-Paul(1981).『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역). 서울: 문예출판사;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Paris: Gallimard, 1964.
_____(1990).『존재와 무 상, 하』. 서울: 을유문화사; L'Etre et le ne(')ant. Paris: Gallimard, 1943.
Schwab, Klaus(2016).『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역). 서울: 새로운현재;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Portfolio Penguin, 2016.
Seligman, Adam(1992). The Idea of Civi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ocqueville, Alexis de(1997),『미국의 민주주의 I, II』, 임효선 · 박지동(공역), 한길사,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Vintage Books (edited by Phillips Bradley), 1957.
Toffler, Alvin(1988).『제3의 물결』, 장문평(역). 서울: 청목; The Third Wave. New York: Bentam Books, 1981.
Tyson, Neil and Goldsmith, Donald(2005).『오리진』, 곽영직(역). 서울: 지호; Origi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4.
Van Til, Jon(2000). Growing Civil Socie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구혜영(한양사이버대 교수)

윤대식(한국외국어대 교수)

조중근(전 장안대 교수)

정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세션 2

□ 사 회 □

김석준(전 안양대 총장)

□ 발 표 □

- 신운용(안중근평화재단 책임연구원), “한국의 민족주의 현실과 대안모색”
- 정형욱(아주대 교수), “한국사회 역사관의 사색당파성”

□ 토 론 □

윤창원(서울디지털대 교수)

김지영(숭실대 교수)

황재동(새만금이주민센터 센터장)

신용우(간도학회 이사)

2018년 연례합동학술회의

세션 2 〈발표 1〉

한국의 민족주의 현실과 대안모색

신운용(안중근평화재단 책임연구원)

한국 민족주의의 현실과 그 대안 모색
- 한국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

신운용(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5.1 경기장의 15만 평양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중략)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밑줄: 글쓴이)*

위 연설문의 핵심 주제는 '민족'이다. 하지만 민족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과정에 있다. 대일항쟁기의 최대의 민족문제는 국권회복이었고, 오늘날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통일민족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명령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

* YTN, 2018년 9월 19일자, 「[현장영상] 문재인 대통령, 북측 참석자 15만 명 앞에서 연설」 (https://news.v.daum.net/v/20180919223907548).

위원과 더불어 15만 북한 사람들 앞에서 천명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바로 ‘신민족주의’ 시대를 천명한 것이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이 순간에도 한국사를 움직이는 엄연한 핵심 이념이자 이상인 것이다.

이러한 ‘신민족주의’의 열망은 99년 전 1919년의 3.1혁명*으로 분출된 사상적 에너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쓴이는 우선 1900년 『황성신문』에 민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래† ‘한국 민족주의’는 1900년대에 일정한 과정을 걸쳐 ‘민족주의’로 표출되었고, 다시 1910년대 민족독립투쟁의 에너지원이 되었다. 우선 한국민족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학계에서는 한국근대 민족주의를 이끌면서 종교· 계급·지역·남녀노소를 초월하여 민족국가 건설 기반을 마련한 일련의 세력은 누구이며, 그들의 사상적 기반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온힘을 기우려왔다. 특히 정영훈 등이 대종교의 민족독립투쟁과 단군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한국민족주의의 배경과 성격을 규명하는데 진력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 근현대사를 움직인 핵심 사상인 한국 민족주의는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국사의 신화를 넘어서』·『역사학의 세기』를 중심으로 일련의 ‘반민족주의’ 풍조가 세계화·다문화 열풍과 맞물려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했듯이, 통일민족국가의 수립 없이는 한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통일민족국가 완성을 위한 이론적 근거는 바로 한국 민족주의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논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쓴이는 우선 근대 한국 민족주의의 성립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 민족주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반한국민족주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국민족주의의 부활과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하려고 한다.

2. 한국 민족주의의 등장과 발전

---

* 1919년 3월 1일의 민족 에너지의 폭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3.1운동’이라고 칭하는 것은 역사 용어로 적당하지 않다. ‘국권재민론’과 ‘주권고유론’을 바탕으로 한 모든 계급과 종교의 민족적 융합과 통합이라는 근대의 경험은 바로 한국사의 혁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3.1혁명’이 3.1운동보다 더욱 정확하게 역사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 『황성신문』 1900년 12월 6일자, 「寄書(漆夏生)」.

‡ 이에 대해서는 정영훈의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고 된다. 정영훈,「단군과근대 한 국 민족운동」,『한국의정차와 경제』 8, 한국학중앙연구원 , 1995; 「단기연호개천절국 경일, 홍익인간교육이념: 현대한국에서의 단군민족주의 제도화에 관한연구」,「정신문화 연구」 113, 한국학중앙연구원 , 2008; 「한민족의정체성과 단군민족주의」, 『민족문화 논총』 55,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2013 ; 「민족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정체 성」,『한민족연구』10, 한민족학회, 2010; 「삼일운동과 단군민족주의」, 『한국동양정치학사상연구』 1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2.

1) 전근대 단군론과 그 의미

4세기 고구려와 백제에 5세기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한국사는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에서 단군고조선 시대로부터 수천년 동안 형성된 한민족의 문화원형은 고려 팔관회에서 보듯이 불교에 일부 수용되거나 사리지는 과정을 겪었다. 여말의 국난 상황 속에서 단군론자들이 등장하여 대몽항쟁과 조선건국의 이론을 제공하였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점차 성리학 중심의 사회로 점차 고착화되었다. 조선 후기로 내려갈수록 명을 중심으로 한 사대주의는 조선에 만연하였다. 이는 자국의 역사를 주·한·당·명의 역사에 예속시키는 사대주의 역사학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는 정약용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당시 조선의 지식인은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이에 근대 한국 내부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민족 내부에서 천도교(동학)와 대종교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다른 하나는 민족 외부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충전되었다. 한국 근대민족주의는 전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 근대민족주의는 서양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면서 그 대항이론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1895년 청일전쟁 발발과 '동학혁명' 전개는 한국근대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청일전쟁으로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반면, 조선은 민족내부의 모순으로 스스로 일제에 대항할 기층 세력(동학)을 제거했던 것이다. 기층 세력의 손실은 침략세력에 대항할 에너지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익현 등 위정척사 세력을 중심으로 한 근왕적 의병이 일제에 저항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신분제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대안세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리학적 지배질서에 완전한 균열을 가져온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당시 조선 내부에서는 국왕중심의 왕조사에서 민족중심의 한민족사로 인식전환이 점차 진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왕조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내재되어 있던 '국조 단군'과 '단군의 지손'이라는 역사관이 위기상황에서 폭발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군인식은 특히 여말선초의 일연·이승휴·이색·권근·하륜·정척·조준·김사형 등이 제시한 대몽항쟁의 이론, 조선건국의 이론적 당위성, 조선의 정체성으로 원용되었다.‡ 특히 단군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요(堯)임금과 동시대이며, 요하 이동을 고조선의 강역으로 인식한§ 이성계는 목자득국론(木子得國論)으로 단군을 내세워 기층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

* 신운용, 「조선 건국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시론-여말·선초의 단군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의 단군인식과 단군운동』, 세계역사문화연구소(국제평화 대학원대학교 출판부), 단기 4339(2005)년 참조.

† 신운용, 「조선시대 패수(浿水) 논쟁과 그 의미」, 『국학연구』 20, 2016, 116쪽.

‡ 신운용, 「한민족의 정체성-단군론을 중심으로-」, 『한민족공동체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223-239쪽.

§ 『대종실록』 권1 총서 49번째 기사.

이는 단군신앙이 민들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조선 국내의 단군인식은 권근의 활약으로 명태조가 단군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단군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의 이러한 단군에 대한 인식은 세조 때 단군관련 서적이 100여종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에서 그 의미를 더 한다. 이는 성리학 관련 서적보다 단군관련 서적이 여말선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조선은 점차 성리학 질서가 고착되는 상황 속에서 북애 등이 단군론을 주창하기도 하였지만, 단군세력과 단군론은 지하로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영토의식의 확장과 더불어 단군은 국조로서 확고하게 정착되었다. 조선 역사의 출발을 기자와 관련시킨 정약용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성리학자들은 단군을 국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유희령·허묵·북애·서형수·이종휘·신경준 등에서도 증명된다.† 이러한 흐름은 바로 대한제국기 김교헌 등이 주도한 『문헌비고』를 중심으로 고조선강역과 단군의 존재가 부각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 기층사회에서도 이어졌다. 이는 1885년 4월에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무당내력(巫堂來歷)』에 단군을 청배하고 나서 성스러운 뜻으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한다. 옛날에는 단조의 복색을 사용하였다(檀君請陪後 以聖意所願 使之成祝云 舊時以檀祖服色用之”§라는 기록에서도 보인다. 이러한 무가를 읊은 민들은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었던 것이다. 이는 1871년 영해·문경 등지에서 이필제(李弼濟)가 자신을 단군의 화신이라 하여 사람들을 봉기하도록 이끈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1876년 ‘단군현성전(檀君顯聖殿)’에서 발행된 『개제성적도지전집(開帝聖蹟圖誌全集)』에서 단군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단군의 권위가 민간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며, 민들은 줄기차게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597년 정유재란 때 끌려가 일본 가고시마(鹿兒島)에 정착한 조선 도공들은 단군을 종교차원에서 섬기었다.‡‡ 이는 여말 선초에 널리 퍼져 있던 단군신앙이 16세로 이어졌으며, 조선 기층민 사이에서 단군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단군이 국경을 넘어 일본으로 강제 연행된 도공들이 자신들의 삶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되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00년대 일본관비 유학생들이 발견하여 공수학보(共修學報)에 실은 사실§§에서 보듯이 일본유학생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었다.

** 태종실록 권17, 9년 4월 1일(을유)조.
* 권근 원자/권람 집주/권광욱 역주, 『응제시집주』, 해돋이, 1999, 75-76쪽.
† 신운용, 「한민족의 정체성-단군론을 중심으로-」, 229-245쪽.
‡ 徐大錫, 「巫堂來歷 解題」, 『巫堂來歷』,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5쪽.
§ 서울대학교 규장각, 「 대거리(大巨里) 속칭최장군거리(俗稱崔將軍巨里)」, 위의 책, 35쪽.
** 『道源記書』(『東學思想資料集』1, 아세아문화사, 1979, 215쪽).
†† 서영대, 「근대 한국의 단군 인식과 민족주의」, 『동북아역사논총』 20, 동북아역사재단, 2008, 19-20쪽.
‡‡ 『대종실록』, 9년 4월 13일(乙卯)조.
§§ 『大韓每日申報』 1907년 9월 21일자, 「日本鹿兒島에 韓人村落(共修學報謄載)」.

2) 근대 민족주의의 등장과 발전

근대에 들어와 단군을 종교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인물은 김염백(金廉白, 1827-1896)이다. 그는 1852년 26세 무렵 묘향산으로 들어가 단군이 수련하였다고 전해지는 중천굴(中天屈)에서 3년간 정진하였다. 그 결과 단군관련 서적을 얻었고 단군을 종교적으로 체험하였다고 한다. 이후 각지를 돌아다니며 단군관련 설교를 하였으며 단군제사법(檀君祭祀法)을 전하였다. 특히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교인을 확보하는 등 교세를 확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1894년 동학농민군 봉기 무렵 승려들의 모함으로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로 오인되어 1896년 처형당하고 말았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김염백 교단에 『참전계경』으로 알려진 『성경팔리(聖經八理)』가 있었다는 사실을 클라크(C. A. Clark)*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군 경전이 늦어도 김염백이 숨진 1896년 이전에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훈모의 단군교단이 그를 선각자로 여겨 그의 신위를 모시고 단군성전 왼쪽에 제실을 마련하여 봄가을로 제례를 올렸다고 한다.†"라는 기록에서 그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김염백보다 주목되는 인물은 백두산 단군세력의 중심인물 백봉신사(白峯神師)이다.‡ 왜냐하면 백봉은 한국 근대 민족주의를 이끌었던 대종교세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1906년 1월 24일 일본에서 귀국하여 부산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나철을 만난 백봉의 제자 백전(伯佺)은 1908년 12월 5월과 31일 두 번에 걸쳐 일본에 있던 나철에게 두일백(杜一白)을 보내 단군교 경전과 입교절차서 등을 주면서 단군교를 받들라고 권유하였다. 결국 "全民族이 擧族的으

"拳地大呼曰汝等은 新羅忠臣朴堤上의 慘殺當ᄒᆞᆫ것슬 莫念ᄒᆞᄂᆞᆫ가 無禮無義ᄂᆞᆫ 不可近也라ᄒᆞ고 同盟을 締結ᄒᆞ야 曰冠婚喪祭ᄅᆞᆯ 自我同種ᄒᆞ고 慶吊休戚을 自我同族이라ᄒᆞ야 太和同族五千萬中에 別作韓人世界ᄒᆞ니 猗歟偉歟라 歐亞에 無例로다 於焉間風霜이 屢改에 人口가 漸殖ᄒᆞ야 至今은 戶可百餘오 人可千數라 現住日本九州鹿兒島ᄒᆞ니 三百年을 經過ᄒᆞ고도 尙今一年一次式檀君祭와 望闕禮ᄅᆞᆯ 行ᄒᆞ고 呼父呼母ᄂᆞᆫ 韓國語로 以ᄒᆞ며 故國情話로 戀戀不忘ᄒᆞᆫ다니 如彼同種은 實로 處韓衣韓ᄒᆞ며 ●韓食韓하면셔 反히 外人心腸을 換作ᄒᆞ야 祖國을 罔念ᄒᆞ고 國土를 擅賣ᄒᆞᄂᆞᆫ 韓人보다ᄂᆞᆫ 霄壤莫及이라 可敬可尙이로다 完"

그런데 위의 내용이 1904년에 공포된, 「단군교포명서(대종교종경종사편수위원회, 『대종교중광육십년사』, 대종교총본사, 4428(1971)년, 89쪽)에 언급된 것을 보면 일본에서 단군을 모신 조선 도공들의 이야기는 1904년 무렵 이미 알려진 사실로 보인다.

* Charles. A. Clark, Religions of Old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61) p.140.

† 鄭鎭洪 編輯兼發行, 『金先生廉白記』, 檀君敎支部, 1924, 참조.

‡ 백봉의 실존론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조인성, 「한말단군관계사서의 재검토: 신단실기 단기고사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 국사편찬위원회, 1989, 239-240쪽; 박성수, 「홍암 나철과 홍익인간사상」, 『홍익문화 통일강연 시리즈』 2-3호, 홍익문화통일협회, 2002, 10쪽), 백봉은 단군교가 중광 되고 나서 약 1년 3개월 후에 게재된 다음과 같은 『황성신문』 기사에도 실존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皇城新聞』 1910년 5월 25일자, 「雜報-檀君敎說筆記」(밑줄: 필자)).

그리고 백봉을 실존인물로 보는 논자로 다음과 같다. 정영훈(홍암 나철의 사상과 현대적 의의, 국학연구 6, 국학연구소, 2001)」·조준희(白峯神師의 도통전수에 관한 연구」, 『선도문화』 1, 선도문화연구원, 2006)·김탁(「백봉교단(白峯敎團)의 실체와 종교사적 의의」, 『道敎文化硏究』 33, 韓國道敎文化學會, 2010) 등을 들 수 있다.

§ 대종교종경종사편수위원회, 위의 책, 93쪽.

로 一致團合하여 生命의 根本体인 檀君大皇祖를 至誠崇奉하고 그 敎化의 大恩아래에서 神化의 大力이 없는 限 成就될 수 없음을 切實히 깨달은*” 나철은 정훈모와 더불어 일본에서 1908년 12월 31일 밤 두일백에게 영계를 받고 단군교에 입교하였다.† .

이후 나철은 1909년 2월 5일 단군교(대종교)를 중광하였다. 이는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에 잘 드러나 있듯이, 외세의 침략이라는 시대상황 극복과 종교적 열망이 결합되어 민들과 지식계층이 대종교에 흘러든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종교중광육십년사』에는 대종교 중광 이유를 “조국의 쇠운을 회복시킴과 아울러 동양평화와 인류의 자유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대이념 하에.”**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대종교 중광은 인류가 나가야 할 ‘평화’와 ‘자유행복’이라는 절대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대한제국을 넘어 ‘동양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조선의 시대정신이 단군교(대종교)를 중광시켰던 것이다.

한편, 역사를 주체적으로 해석한 이러한 민간의 움직임은 대한제국의 정부의 정책에서도 감지되고 있었다. 그 주된 내용으로 ‘환구단 제천의식,’ ‘역사교과서 간행’, ‘『증보문헌비고』 편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강조하는 경향은 이미 1895년 학부에서 출간한 『조선역사(朝鮮歷史)』·『조선역대사략(朝鮮歷代史略)』·『조선략사(朝鮮略史)』와 1897년 대한제국이 출발하고 나서 2년 후인 1899년 학부에서 간행한 『동국역대사략(東國歷代史略)』·『보통교과동국사략(普通敎科東國史略)』 등에 잘 드러나 있다. 이들 사서에서 단군을 한민족의 시원으로 확실하게 규정한 조선정부의 주체적 역사인식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조선정부는 최초의 근대 역사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역사』에서 근대사서 가운데 처음으로 조선 건국 기원을 사용하여 자주의식을 드러냈다. 이는 근대사서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의 연호에서 벗어나 조선 건국 기원을 사용하여 자주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크다.

특히 1903년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圭)의 건의로 국가차원에서 시작된 『증보문헌비고』(1903-1907)의 편찬 작업에 김교헌·조완구·유근 등 훗날 대종교의 핵심세력이 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에서 대종교 중광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대종교 입교 결정은 이들의 역사인식과 종교의식이 대종교의 그것과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민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김택영의 『동사집략(東史輯略)』

---

* 위의 책, 79쪽.
† 위의 책, 77-78쪽.
‡ 위의 책, 81-91쪽.
§ 대종교에 참여한 세력은 ① 나철·오기호·이홍래·윤주찬·최동식·김인식·이기 등의 을사5적 처단시도 참여(자신회) 계열, ② 신규식·박찬익·박승익·강우·백순 등의 공업전습소 계열, ③ 신규식·조성환·강진구 등의 무관학교 계열, ④ 김윤식·박은식·조완구·장지연·유근 등의 개신유교(대동교) 계열, ⑤ 윤세복·안희제·이극로·이원식·남형우·김갑·김동삼·신팔균·이경희·이시영·신백우·안호상·신채호·서상일·이범영·신성모·차병철·김규환·윤병호·김사용 등의 대동청년단·조선국권회복단 계열, ⑥ 지석영·조완구·김명수(金明秀)·주시경·박은식 등의 국문연구회(소)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신운용, 「대종교 세력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 21-44쪽.).
** 위의 책, 80쪽.

(1902)·『역사집략(歷史輯略)』(1905)·현채(玄采)의 『중등교과 동국사략(東國史略)』(1906), 원영의(元泳義)·유근의 『신정동국역사(新訂東國歷史)』(1906)·유근의 『초등본국역사(初等本國歷史)』(1908년)·『신찬초등본국역사(新撰初等本國歷史)1』(1910년)·신채호의 『독사신론』(1908년)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 가운데 한국근대 사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신채호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전근대사학의 한계를 본질적으로 극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1908년 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되어 당시 큰 충격을 준 『독사신론』은 한국 사학사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동시대의 다른 역사서와 큰 차별성을 보였고 그 만큼 영향도 지대하였다. 그는 왕조사에서 '민족사'로 역사 연구의 본질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으로 부터 시작된 한국사를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서술하였던 것이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으면 국가가 없다."*라는 그의 주장은 바로 민족이 역사와 국가의 근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족의 시원에 대한 그의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그는 평양성과 삼랑성의 건축은 단군이 원정(遠征)한 곳을 기념하여 세운 성곽이라고 주장하면서 단군을 국내에 한정하던 모든 한국사서의 잘못을 질타하였다. 특히 그는 단군이 내려온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설정한 기존의 사서를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안정복의 주장†을 수용하여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주창하였다. 이러한 신채호가 1913년 이전 대종교로 입교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밖에도 대종교 중광 이전까지 단군관계 기사가 실려 있는 민간과 학부인가 역사서로 최경환의 『대동역사(大東歷史)』(1905)·국민교육회의 『보통교과서 대동역사략(普通敎科書 大東歷史略)』(1906)·정인호(鄭寅琥)의 『초등대한역사』(1908)·박정동의 『초등본국사략』(1909)·헐버트·오성근(吳聖根)의 『대한력ᄉᆞ』(1908)·조종만의 『초등대한력ᄉᆞ』(1908)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단군인식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근대 신문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이다. 황성신문은 1898년 9월 5일 「社說」에서 "昔我東方에 檀君이 初降ᄒᆞ미"라고 하여 단군이 대한제국의의 시조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대한매일신문』은 1905년 5월 11일자 기사에서 "檀君以來四千年疆土五百年 宗社를 一朝에 賣國奸賊之手에 付ᄒᆞ야 滅亡ᄒᆞᄂᆞᆫ 境에 至ᄒᆞ얏스니."라고 하여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단군 시조론이 보다 구체화되고 강조되기 시작한 시점은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된 1905년 무렵이었다. 이 시기 근대 민족개념이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 위와 같음.

† 『東史綱目』 附錄 下卷 地理考 太白山考.

‡ 『종문영질』(대종교 총본사 소장).

§ 이에 대해서는 신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형화론'」, 『안중근과 한국근대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연구소, 2009, 328-330쪽 참조.

이후『황성신문』1907년 7월 2일자의「아조단군(我朝檀君)」*을 필두로 1909년 2월 5일 대종교가 중광되기 전까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문에 '始祖檀君(聖人)'†, 檀君后裔,‡ '神聖ᄒᆞ신 檀君之子孫'§ 등의 표현이 등장한 데서 보듯이 근대언론은 단군민족주의**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 근대 지식인이 생각하는 민족주의는 늦어도 임진왜란 시기부터 출발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한국 민족주의가 일제가 소개한 서양의 내셔날리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민족주의는 한국 근대를 움직인 동력으로 작동하였던 것이다. 특히 단군 신성론(神聖論)은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이론으로 등장한 건국 시조론과 단군 문명국론을 넘어 점차 종교영역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神聖ᄒᆞ신 檀君', '檀神人계오셔 이ᄅᆞᆯ 세으시며'§§, '我建國聖祖檀君'***, '聖祖의 功德'†††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군 신성시화 경향은 단군교가 중광된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민족주의 사학의 핵심으로 정착되었다. 이는 단군릉 치제·첨성단 등 단군관련 사적의 소개‡‡‡, 개천절(개극절)과 단군승천절 등 단군교의 활동상황,§§§ 부여 자손론에 기반한 만주 재인식****, 단군예찬론†††† 등으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

* 『皇城新聞』1907년 2월 6일자,「論說-精神과 感覺」.

† 『皇城新聞』1907년 4월 27일자,「論說-聽布穀」;『皇城新聞』1908년 7월 3일자,「論說-妙香山의 晩翠景況」;『皇城新聞』1909년 1월 27일자,「論說-大駕西巡」;『皇城新聞』;『大韓每日申報』1908년7월 31일자,「國家ᄂᆞᆫ 卽一家族」;『大韓每日申報』1908년 3월 28일자,「斜陽悲歌」;『大韓每日申報』1908년 9월 27일자,「進步ᄒᆞ라 同胞여」;『大韓每日申報』1909년 2월 16일자,「漫評-希望歌」;『大韓每日申報』1908년 12월 11일자,「文壇-讀史新論 (續)」.

‡ 『皇城新聞』1908년 12월 3일자,「論說- 社會가稍稍進步乎」.

§ 『皇城新聞』1908년 9월 12일자,「論說-夢拜白頭山靈」;『皇城新聞』1907년 2월 16일자,「論說」;『大韓每日申報』1908년 1월 1일자,「新年頌祝」;『大韓每日申報』1908년 12월 2일자,「韓半島」;『大韓每日申報』1908년 9월 4일자,「打破家族的觀念」;『大韓每日申報』1908년 4월 2일자,「論說-日本의 三大忠奴」.

** 정영훈,

†† "檀君箕子의 神聖后裔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기자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皇城新聞』1907년 3월 20일자,「論說」;『皇城新聞』, 1908년 3월 27일자「論說-嗚呼曷歸」;『皇城新聞』,1908년 5월 14일자,「論說-高靈申氏의 學契影響」;『皇城新聞』1908년 6월 23일자,「論說-學界進化」;『皇城新聞』1908년 10월 8일자,「論說-鐵椎子傳」;『大韓每日申報』1908년 7월 30일자,「爲國壹祝」;『大韓每日申報』1908년 9월 15일자,「西懇島의 曙光」).

‡‡ 황성신문은 한국민족주의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임진왜란(16세기)과 관련지여 설명하고 있다. 이점은 대한제국기의 지식인들은 '반' 한국민족주의자들과 달리, 한국 민족주의를 근대의 산물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孕育於上古ᄒᆞ고 長成於十六世紀ᄒᆞ고 光輝活躍於二十世紀之新天地ᄒᆞ야 震撼宇宙ᄒᆞ며 衝突東西ᄒᆞ고 灑盡英雄之熱血ᄒᆞ며 擲盡人民之肝腦ᄒᆞ야 知此者ᄂᆞᆫ 興ᄒᆞ며 昧此者ᄂᆞᆫ 亡ᄒᆞ고 得此者ᄂᆞᆫ 生ᄒᆞ며 失此者ᄂᆞᆫ 死ᄒᆞᄂᆞ니 此果何物哉아 槍歟아 砲歟아 刀歟아 釰歟아 曰 否라 槍也砲也와 刀也釰也ᄂᆞᆫ 所以 爲此物而利用也라 不可遂認以此物也오 獨立歟아 自由歟아 文明歟아 進步歟아 曰 否라 獨立也自由也와 文明也進步也ᄂᆞᆫ 所以 爲此物而發生也라 不可遂信以此物也니 然則 此物은 何物고 卽右揭ᄒᆞᆫ 問題 民族主義라ᄂᆞᆫ 것이 是라."(『皇城新聞』1907년 6월 20일자,「民族主義」).

§§ 『皇城新聞』1908년 7월 1일자,「雜報-愛國死士追悼會趣旨書」.

*** 『大韓每日申報』1908년 6월 17일자,「寄書-歷史에 對ᄒᆞᆫ 管見二則」.

††† 『皇城新聞』1909년 11월 21일자,「論說-檀君聖祖祭日」.

‡‡‡ 『大韓每日申報』1909년 5월 5일자,「檀陵改築」;『大韓每日申報』1909년 5월 5일자,「檀陵改築」.

§§§ 『皇城新聞』1909년 11월 21일자,「雜報-開極節紀念」;『皇城新聞』1909년 11월 21일자,「論說-檀君聖祖祭日」;『皇城新聞』1909년 11월 21일자,「開極節紀念」;『皇城新聞』1910년 4월 22일자,「雜 報-昇天節紀念祭」;『皇城新聞』1910년 5월 20일자,「檀敎敎科書」;『大韓每日申報』1910년 5월 20일자,「雜報-敎書發刊」;『大韓每日申報』1909년 11월 20일자,「開國日慶祝」;『皇城新聞』1909년 11월 21일자,「開極節紀念」.

**** 『皇城新聞』1910년 1월 22일자,「論說-我抱樂觀的思想」;『皇城新聞』1910년 4월 21일자,「論說-我民族의 神聖歷史」.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909년 11월 15일 대한의학교는 휴학을 단행하면서까지 개천절을 기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군이 어느 특정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민족의 숭배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황성신문은 "我國의 宗教ᄂᆞᆫ 檀君聖祖ᄭᅴ옵셔 支那의 唐堯와 倂立ᄒᆞᆯ 時에 五倫의 教가 始立ᄒᆞ얏고"†라고 보도하였다. 더 나아가 "今日僉位ᄭᅴ셔 吾教를 信奉ᄒᆞ시니 實로 教門의 莫大ᄒᆞᆫ 榮幸이을시다"‡라고도 게재하여 한민족의 종교는 '단군교'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대한매일신보도 "仙教ᄂᆞᆫ 佛教輸入以前부터 有ᄒᆞᆷ이(중략)紀年覽에 檀君을 天仙이라 稱하엿스며 (중략)崔孤雲鸞郎碑序에 曰「國有玄妙之道仙教是已라하고」又曰設教之源備詳션史라ᄒᆞ니 噫라 션史가 今에 傳ᄒᆞᆫ 者ㅣ 有ᄒᆞ면 民族進化의 原理를 考據ᄒᆞᆷ에 大材料가될ᄲᅮᆫ더러"라고§ 하여 우리의 교유종교가 선교임 선언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단군민족주의는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상층부의 인사 2/3가 단군민족주의자(대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917년 「대동단결의 선언」으로 왕조체제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제를 주창한 세력도 이들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독립정쟁의 사상적 바탕이었으며 바로 3.1혁명선언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체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독립전쟁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뿌리채 뒤흔드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3. 한국 민족주의의 현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근대 민족주의는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는 이론으로 출발하여 독립투쟁의 사상적 에너지로 작동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사상적 기조는 바로 민족주의이었던 것이다. 1948년 분단 체제의 성립에 대한 대응이론도 민족주의였으며, 이승만·박정희 전도환·노태우 독재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도 민족주의에서 공급받았다. 특히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완성시킬 사상은 민족주의만이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

†††† 『大韓每日申報』 1909년 8월 6일자, 「檀君歌」; 『大韓每日申報』 1910년 5월 6일자, 「漫評-農夫歌」.

* 『皇城新聞』 1909년 11월 21일자, 「開極節紀念」. 이와 관련하여 김교헌의 동생 김준(金準)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0년 3월 15일(음력)에 입교(대종교종경종사편수위원회, 위의 책, 826-827쪽)한 그는 1902년 대한의학교를 제1기로 졸업하고 육군부위로 임관하였다. 1903년에는 대한의학교의 교관이 되었고 1910년 경술국치까지 정3품 통정대부 육군참령삼등 군의장을 지냈다. 대한의학교의 개천절 기념식은 이러한 김준과 같은 대종교인의 영향으로 보인다.

† 『皇城新聞』 1910년 3월 3일자, 「我韓의 宗教와 歷史」.

‡ 『皇城新聞』 1910년 5월 25일자, 「檀君教說筆記」.

§ 『大韓每日申報』 1910년 3월 11일자, 「論說-東國古代仙教考」.

** 대종교신자는 1910년 3월경에는 3,500명(『大韓每日申報』 1910년 3월 13일자, 『雜報-檀君教況』), 1910년 7월경에는 6,000명(『大韓每日申報』 1910년 7월 12일자, 『雜報-檀君教擴張』), 1915년경에는 15만명(대종교종경종사편수위원회, 위의 책, 156쪽)으로 급증하였다.

††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의원 29명 중 대종교 인사가 21명이었으며 정부조직 12명중 11명이 대종교인이었다(현규환, 『한국유이민사』, 1967, 어문각, 571쪽).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 식민지근대화론·반통일론·세계화주의·다문화주의이라는 시각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반민족주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계의 '반'민족주의 논조와 경향에 집중하여 한국 민족주의의 현실을 진단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하여 민족주의의 효용성을 되짚어보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점검하려고 한다.

반민족주의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세력의 붕괴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일제의 타율성론·정체성론을 근간으로 하는 식민사학 극복 방안으로 주창되었던 '내재적 발전론'이 퇴보하고 식민지근대화론이 퍼져나가는 국내의 현상을 낳았다. 이에 편승하여 '반민족주의' 경향은 서구와 일본의 수정주의 역사학(일본 우파사관) 내지 자유주의(리버럴리즘)와 결합되어 한국 민족주의는 주류에서 서서히 밀려나가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한국 민족주의의 후퇴는 한국 학계를 둘러싼 주변부의 영향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로 한국사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돌출되었다. 하나는 한국 현대사의 구조적 문제로 식민사학이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역사학의 경우,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에서 복무하던 이병도·신석호 등이 현대 한국 역사학에 끼친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그러한 결과 신채호 등 한국민족주의사학의 '고대사 해석'은 남한에서 밀려나 오히려 북한에서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일항쟁기 한국민족주의 사학의 사각에서 해석된 고대사는 제거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사군 문제와 관련하여 일제의 주장이 상당부분 계승되고 있는 현 주류 고대사학계에 의해 '유사역사학'이라고 몰리는 '희극'이 연출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식민사학의 범주에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경제사를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재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안병직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국독립투쟁 세력의 사상적 근원인 한국 민족주의사학을 부정하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세력과 직결되어 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뉴라이트 세력(신 친일세력)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1999년에 출판된 임지현의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반민주주의 논리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국민족주의에서 찾는 경향성을 보였다

아울러 2001년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의 대표적인 교과서인 후쇼사교과서의 등장에 맞선 세력과 연결된 일본교과서바로알기운동본부(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한국역사역구회·역사문제연구소 등의 한국사관련 단체들도 주목된다. 이들은 일본인 학자들과 교과서문제를 논의하

* 송호정, 「최근 한국상고사 논쟁의 본질과 대응」, 『역사와 현실』 100, 한국역사연구회, 2016; 젊은 역사학자모임,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역사학』, 역사비평사, 2017.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배반이다』, 소나무, 1999.

면서 한국의 교과서가 과도한 민족주의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으며, 한국 현대사를 일제의 '국민' 만들기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역사학 세력은 1990년대 이전 모든 정권을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민' 만들기라고 비판하면서* '반' 민족주의 사학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한국사에서 '동아시아사'로」, 「국가(국민)에서 '시민'(시민)」, 「갈등에서 '평화'」로 역사인식을 전환하였다.† 결국 이들의 생각은 "교과서가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으로 서술되었다."는 서중석의 주장‡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후쇼사교과서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학계·시민단체의 일본교과서 왜곡 비판을 일본정부는 검정체제를 이유로 피해갔고, 그 여파는 오히려 한국 역사학계로 전이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에 충격을 받은 역사학계의 주류는 '반' 민족주의로 전향하여 자유주의사관이 풍미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자유주의 역사학은 임지현 등 서양사 연구자와 일본 리버럴리즘의 영향으로 그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 역사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하였다. 이는 신채호 이후 1990년대까지 유지되어 오던 민족주의사학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발과 더불어 식민지근대화론에 뿌리를 둔 뉴라이트 세력의 자유주의사관에 대한 도전이 더욱 노골화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뉴라이트 세력은 역사기술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카드로 자유주의 역사학에 맞서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민족주의 사학이 배재된 상황 속에서 교과서를 둘러싼 뉴라이트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대립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2017년 6월 문재인 정권의 출발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되어 결국 자유주의 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들의 대립은 한국 민족주의 사학이 부정되는 구조 속에서 정권의 변동에 따라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2001년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시작된 뉴라이트의 식민지근대화론 세력과 이에 맞선 자유주의 세력이 대립만 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학문의 교류라는 명목으로 '반한국민족주의' 전선 구축을 위한 공생관계를 연출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자와 자유주의 역사학자들이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재적 발전론으로 대표되는 현대 한국 민족주의사학에 대한 '공격'이라는 '기묘한' 공생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묘한' 현상은 좌파 역사가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알려진 역사문

---

* 임지현, 위의 책. 임지현의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서양사의 시각에서 한국사 연구를 비판한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사 연구가 깊지 못한 서양사 연구자가 서구 내셔널리즘과 한국민족주의를 등치시키는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박정희 정권을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진순은 "민족주의 그 자체를 박정권 파시즘의 기반으로 파악하는 것은 극히 일면적이라 할 수 있다."(도진순, 민족과 근대 전후,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임지현 저,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소나무, 1999)」, 『역사학보』 162, 역사학회, 1999, 266쪽)고 비판하였다.

† 신운용, 「한국 학계의 '반민족주의'논조와 '독도공유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배성준의 '독도공유론'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38, 단군학회, 2018, 8쪽.

‡ 서중석, 「현행 중고교 교과서 현대사 부분 분석과 개선방향」,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모색』(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제2차 심포지엄),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동부.

제연구소 기관지 『역사비평』에 식민지 근대화논자이며 뉴라이트의 주축세력인 안병직*과 이인호†의 대담이 실린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는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식민지 근대화론자와 식민사학자들의 집단적 반발의 결과물‡로 한국사 '해체'를 목적으로 '반한국민족주'의 성향의 연구자 이영훈·박지향·김철·김일영 등이 주도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과, 이영훈·박지향·도면회·윤해동·이성시·김기봉·박유하·배성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이 기획한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휴머니스트, 2004)와 『역사학의 세기』(휴머니스트, 2009) 등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점은 아래의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서 확인된다.

《재인식》은 (중략) 민족 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이 우리 역사 해석에 끼친 폐해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민족 지상주의와 현대사에 대한 좌파적 해석이 그동안 우리 지식계를 압도해왔다는 사실은 최근 자주 지적되고 있으며, (중략) 민족주의는 본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이념이다. 우리 역사에서 특히 민족 지상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은 첫째, 그것으로는 고난의 우리 현대사를 제재로 인식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민족 지상주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요금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논리와 관련된 여러 양태에서 잘 드러난다. 민족 지상주의는 민족의 다른 모든 가치들을 압도하고 지고의 가치로 부상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중략) 《재인식》이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균형 잡힌 역사관으로 역사에 대한 편협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은 태도이다(밑줄: 글쓴이).††

여기에서 보듯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의 저자들은 한국민족주의를 '배타적이고 폭력적 이념' 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서양사를 전공하거나 한국경제사 또는 문학 전공자들의 민족주의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무지'와 외면에서 나온 인식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는 민족주의=내셔날리즘=민조쿠슈기(民族主義)라는 서양사· 일본사 중심의 사고가 빚어낸 '비극'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세력과 '반한국민족주'의 인식을 공유하는 임지현·이성시의 경우에서 확연히 들어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 민족주의를 일본의 민조쿠

---

* 안병직, 「나의 학문 나의 인생-안병직-민족주의에서 경제성장주의로」(정재정 대담), 『역사비평』 69, 역사비평사, 2002.

† 이인호, 「나의 학문 나의 인생-이인호-보수적 러시아학의 개척자(한정숙 대담)」, 『역사비평』 60, 2002.

‡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계, 2006, 11쪽.

§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한국민족주의와 서구의 내셔널리즘 그리고 일본 민조쿠슈기(民族主義)를 범죄를 의미하는 적대적 '공범관계'라고 단정하고 있다(「엮음이의 말」,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이는 이들이 한국민족주의에 근거한 한국민족독립투쟁 세력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지가 다분하다. 이신철도 한국민족주의에 대해 이들과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 『해전후사의 재인식』과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역사학의 세기』은 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인물들이 주도하였고, 이들은 현재 한국 '반' 민족주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계, 2006, 12-15쪽.

슈기(民族主義)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타자화시키면서도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살찌우고 강화시키는 한국 민족주의와 일본 민족주의의 '적대적 공범관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중략) '비찬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의 우산 아래 모인 연구자들은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적대적 공범관계' 드러내고 해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처럼 이들은 한국 민족주의와 일본 민조쿠슈기를 적대적 공생관계로 등치시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한국민족주'의 인식은 아래와 같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두둔하면서† 독도공유론을 주장한 배성준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민족사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동아시아 민족 형성의 역사는 민족사의 견고한 껍질을 균열시키고 민족사의 '외부'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작업은 저자(이성시: 글쓴이)가 모범을 보여주었듯이 근현대사 연구자만의 과제도 아닌 역사연구자 전체의 과제이며, 민족사 형성과정이 민족국가 단위로 독립된 것이 아니듯이 동아시아 역사연구자들의 상호 교류 속에서 새로운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밑줄: 글쓴이).‡

이와 같이 국사의 해체를 주장한 이성시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배성준이 "독도문제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민족주의적 인식이다."§라도 하였다. 여기에서 보듯이 그는 '반한국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민족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한민족 의 존재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더불어 일본역사교과서 반대운동을 하면서 받은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신철은 아래와 같이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문제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수립 이후의 교과서는 반식민주의적 역사인식이 강조되는 서술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같은 서술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

* 임지현·이성시 엮음, 「역은이의 말」,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참조.

† 배성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과 '역사수정주의' 비판」, 201쪽.
"민족주의의 역사서술이 여전히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재인식』의 많은 필자들이 지적하듯이, 민족주의의 역사서술이 가지는 '편협함'은 역사 인식과 사료 해석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민족국가의 위기가 거론되는 지금, 100여 년 전 민족국가 형성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출현한 민족주의의 역사학이 신자유주의나 역사수정주의의 공세에 맞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다. 민족주의 비판은 모두의 과제이되 문제는 비판의 방향과 내용이다(밑줄: 글쓴이).

‡ 배성준, 「민족사를 넘어서려는 시도와 곤경-이성시 『만들어진 고대』(삼인, 2001)」, 『역사문제연구』 8, 2002, 역사문제연구소, 194쪽.

§ 배성준, 「독도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선을 위하여」, 『문화과학』 42, 문화과학사, 204-205쪽.

** 이신철,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함정을 넘어서」, 『역사와 현실』 100, 140쪽

을 강조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남으로써 배타적 민족주의 의식이 지나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향은 식민잔재의 미청산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양성'의 도구로 역사교육을 활용하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밑줄: 글쓴이).*

이처럼 이신철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독립투쟁사에 대한 교과서 기술을 '지나친 배타적 민족의식'의 결과라고 폄하하였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배타적' 민족주의에 뿌리는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민족주의에 근거한 독립투쟁사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일제의 역사해석(식민사학) 그 자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그는 한국 민족주의를 일제 민조쿠슈기와 서구 내셔널리즘‡이 추구한 '국민국가'의 개념을 한국 현대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화투쟁사§의 뿌리가 한국 민족주의라는 점을 애써 외면한 결과이자 식민지근대화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정타가 독도공유론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박유하는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을 "천황주의자 미시오 유키오와 같은 부류라고 맹비난한"**데서 보듯 누구보다 열렬한 '반한국민족주의' 대열에 서 있으면서 일본 우파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는 민족주의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뿐 아니라 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모든 '주의'는 원천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주의, 가족주의 등의 '주의'들은 필연적으로 그 바깥에는 있는 이들과 안을 구별지음으로써 가능한 개념이고, 구별하는 순간이 이미 '배척'이 없고서는 자기존립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어떤 '민족' 개념이 정해지는 순간, 그 공동체가 정한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

* 이신철, 「탈식민 탈냉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역사문제연구』 30, 역사문제연구소, 10쪽.

† 이는 대표적인 식민지근대화론자 박효종가 '반'민족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사 기술을 비판한 것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편협한 민족주의'에 근거한 독립운동사를 비판한다」, 『철학과 현실』 67, 2005, 58쪽). 아울러 박종효의 이러한 독립운동사에 대한 비판은 이승만을 강조한 뉴라이트의 경향과 맞닿아 있는 오영섭의 이승만에 대한 기술 강조(「현행 고교 한국사 고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13, 292쪽)로 나타난다.

‡ 내셔널리즘(nationalism)은 내셜날리즘 또는 국가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민족주의'로 잘못 번역한 탓에 자유주의사학이 한국민족주의를 내셔널리즘과 등치시키는 우를 범하였다. 이 연장선에서 한국민족주의와 일본 민조쿠슈기를 같은 의미로 잘 못 이해하고 있다.

§ 민족주의가 대일항쟁기의 민족투쟁과 국권회복이후 민주화투쟁과 민족통일투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글에서 확안된다. 김종근,「1960년대 '민족주의'의 재발견과 질곡 그리고 분화」, 『진보평론』 69,진보평론, 2016; 김기승, 「4월 혁명과 한국의 민족주의」, 『史叢』 71, 역사학연구회, 2010; 이준식, 「민족해방운동의 유산과 민주화운동」, 『역사와현실』 77, 한국역사연구회, 2010; 김정인,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주의」, 『역사와현실』 77, 한국역사연구회, 2010; 김지형, 「민주화운동세대별 분단극복론의 추이」, 『역사와현실』 77; 이수인, 「1980년대 학생운동의 민족주의 담론」, 『기억과 전망』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오제연,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김수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 : 6월항쟁~김대중 정권」, 『사회과학연구』14-2, 서강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6·3동지회, 「6·3학생운동 : 민족자존을 위한 민족주의운동, 최초의 반군부독재 민주화운동」, 2004.

** 박유하,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 사회평론, 2000, 207쪽.

‘민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중략)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경계의식을 조장한다. 그래야만 국가=민족이 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밑줄: 글쓴이).*

박유하 주장의 핵심은 민족주의는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과 직결되는 인식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개천 국민대축제 선포, 단기연호 회복, 해외동포에 대한 민족교육을 부정하면서† 심지어 “단군을 기반으로 한 민족정신의 회복이란 다 말하지만 시대착오적이다.”‡하고 하여 단군마저 부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박유하는 다음에서 보듯이 독도공유론을 넘어 한국의 독도영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다.§

법적해결은 하나의 선택수단이지만 모든 법적해결이 대립하는 쌍방에 형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독도를 양국 공동영역으로 하면 어떨까. (중략) 전쟁을 하면서까지, 즉 평화를 훼손하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영토란 없다. (중략) 그런 의미에서도 독도를 어느 한쪽이 차지하면서 또다시 수십년 혹은 더 먼 후대에까지 불화의 불씨를 남겨 놓는 것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공유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밑줄: 글쓴이).**

이처럼 그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조차 한국 민족주의 발로로 보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하고 있다.††

‘반한국민족주의’의 또 다른 현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국 내의 대응과 비판을 ‘과도한 민족주의’라고 폄하하는 주장으로 표출되었다. 그 대표적인 인사는 박유하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이었으며 매춘부§§로 묘사하면서 그 책임 문제를 일본보다 오히려 강하게 한국에 돌렸다.*** 이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 야스쿠니신사 한국출신자 합장문제 등 일본에 대한 한국의 비판적 입장을 일제 우익의 주장의 연장선에서 모두 한국 민족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서 확인된다.†††

4. 대안모색

---

* 박유하, 위의 책, 200-201쪽.
† 위의 책, 206-207쪽.
‡ 위의 책, 212쪽.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운용, 「「시마네 현(島根縣) 고시 제40호」의 실체와 박유하의 ‘독도공유론’」, 『국학연구』 21, 2017 참조.
** 위의 책, 190-191쪽.
†† 이와 같은 독도 공유론 또는 방기론은 입장은 배성준과 이신철에게서도 보인다(신운용, 위의 논문; 신운용, 「한국 학계의 ‘반민족주의’논조와 ‘독도공유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Ⅱ-이신철의 ‘독도공유론’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38, 단군학회, 2018(미정고)).
‡‡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뿌리와 이파리, 2000, 137쪽.
§§ 위의 책, 89쪽.
*** 위의 책, 75쪽.
††† 박유하가 이러한 주장을 정리한 것이 『반일 민족주의를 넘어서』·『화해를 위해서』·『제국의 위안부』 등이다.

이처럼 한국민족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남북통일을 이루어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현 상황 속에서 그 부활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오히려 한국민족주의의 학문적 부흥 없이는 통일민족국가의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민족주의의 부흥을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보려고 한다.

(1)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계에 반민족주의 세력이 활개를 치게 된 원인은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성찰이 부족하였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일항쟁기의 민족주의 문제는 다각도로 연구 분석되고 있으나 국권회복 이후의 한국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성격 의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민족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장애물이자 동시에 한국민족주의 의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단군학회가 1997년 "단군과 민족문제에 관한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아래와 같은 비젼을 갖고서 창립되었다는 점이 대단히 주목된다.

단군학회의 궁극적 관심사는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학제적으로 탐구하고 민족의 통합과 발전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군학회의 민족정체성 정립작업과 실천적 과제에 대한 접근은 민족사가 물려준 특이한 전통의 하나를 재인식하고 중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곧, 한민족이 역사를 통하여 스스로를 단군의 자손으로 인식해온 전통적 유산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인식전통은 한민족 상고사속의 사실에 토대해서 형성되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한민족의 민족정체의식 속에 자리하면서 민족성원을 하나로 결속해 왔고, 통일과 발전이라는 미래의 과제들과 관련해서도 아직 의의가 살아있다고 본다.

단군학회의 민족정체성 탐구작업과 대안모색작업은 이같은 인식을 공통분모로 하여 역사학, 철학, 종교학, 문학, 민속학, 예술학, 교육학, 정치학, 정책학 등 인문 사회과학의 각 방면에서 전개될 것이다. 학회의 명칭에 표방된 '단군학'은 단군 관련 문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 단군을 동질성의 깃점으로 삼고 전개되어온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반을 학제적으로 탐구하는 개방된 토론의 장으로의 의미를 지향하고 있다. 단군학회의 이 같은 연구-토론활동은 객관성과 과학성을 추구하는 학문본연의 요구에 충실하되, 민족과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학문으로의 실천적 관심 또한 놓치지 않는 가운데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노력을 통하여 탈민족의 경향이 확대되어가는 우리 학술계의 최근 분위기를 균형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지구촌으로 나아가는 한민족에게 개방적이고 건강한 정체성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 http://www.gojoseondangunhak.com/modules/doc/index.php?doc=group&___M_ID=24

물론 단군학회의 설립 배경은 위에 보듯이 반민족주의 세력의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 동안 단군학회는 현재까지 『단군학연구』를 38호 내는 등 한국민족주의 이론의 정립과 전파에 큰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군학회는 초기에 비해 그 세력이 약화된 것도 또한 현실이다. 그 이유를 '반한국민족주의' 세력이 식민지근대화론, 세계화, 다문화 세력을 등에 업고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나, 단군학회 등 민족주의세력의 '무능'과 '안이한 자세'도 한 몫 한 것도 사실이다.

통일민족국가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민족주의가 제 기능을 다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단군학회와 독립투쟁 단체 등 한국민족주의 단체들이 보다 선도적으로 민족담론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성찰 위에 민족주의 세력이 총단결할 시점이다.

(2) 통일민족국가 완성을 위한 이론을 담당할 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남과 북은 지난 70년간 전쟁의 상처 속에서 대립으로 치달아왔다. 한국에서는 반공이 제1의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았고, 북한은 김일성주체사상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모해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남과 북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원수보다도 못한 존재로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이 남북에 뿌리 깊게 박히어 있다.

그러나 올해 극적으로 세 번에 걸쳐 남과 북의 정상은 민족의 화해와 단결만이 한민족의 비극을 끝낼 수 있다는 공통인식, 아래 민족 자결주의와 민족 공동 운명체론을 한민족이 나갈 길이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2018년 9월 19일 평양선언에서 남북의 정상들은 다시 한번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아래 민족의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자주와 민족 자결을 바탕으로 한 민족 공동 운명체론을 보다 확고하게 밀고 나갈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남북간에 이루어진 공동성명이 선언에 머물고 마는 한계를 드러냈듯이, 판문점과 평양 선언도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이를 담보할 이론화 작업을 남북한의 학자들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연구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연구 기반은 거의 붕괴된 상태이다. 기성 학자들 가운데 한국민족주의를 연구 주제로 삼는 분들은 타 분야에 비해 그다지 숫적으로 열세에 있는 것이 사

* http://www.dailian.co.kr/news/view/740498

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민족주의를 주제로 하는 연구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의 소멸은 통일민족국가의 완성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민족주의 연구를 담담할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연구기관(가칭 통일준비연구원)을 정부가 통일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구성하거나 적어도 한국민족주의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4) 남북학자간의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공동 연구와 교류의 체계화와 정례화를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민족주의의 의미는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이론을 제공하는 데 있다. 통일민족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자결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동시킬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학자간의 민족주의에 대한 공동연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족주의에 기반한 남북간의 학술연구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비해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도 한국민족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남측의 단군학회와 북측의 조선역사학회가 2005년 함께 펴낸 『남북 학자들이 함께 쓴 단군과 고조선 연구』를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2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제1부에는 2003년 겨울에 시작하여 2005년 봄에 끝난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공동연구'가 수록되어 있고, 제2부에는 2002년 10월과 2003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공동학술회의에 참가한 남북 학자들의 논문을 선별하여 실었다. 이 연구성과는 국권회복 이후 남북학자가 함께 연구성과를 공유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 앞으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남북 공동연구는 이 책으로 축적된 경험이 기반이 될 것이다.

(5)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성과와 비젼(통일민족주의)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해야 한다.

근대에 들어와 한국민족주의가 흥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상황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독립투쟁가들이 단군민족주의라는 독립된 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한 이론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민족통일을 이루어 통일민족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민족국가의 완성을 위한 이론이 당연히 나와야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통일세력이 양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한국민족주의는 근대의 '단군민족주'의에서 이제 '통일민족주의'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물론 단군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민족통일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뭉쳐야 하지만, 한민족의 숙원사업인 민족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민족주의 이론이 시급히 정리되어야 한다. 이 위에 한민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론을 창출해야만 통일민족국가로 향하는 첫발을 디딜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이는 국내외 홍보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물론 이 사업은 단시일 내에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남과 북이 위에서 언급한 (1)~(4)를 진행하면서 통일민족주의의 기치아래에 온 민족을 통합하여 미래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통일준비 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글쓴이는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서 오늘날의 한국민족주의 현실을 되짚어본 바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한국사에서 정체성과 자주(자결)의식은 여말선초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물론 여말선초 이전에도 최치원 경우에서 보듯이 정체성과 자주(자결)의식은 한국사를 움직이는 사상적 동력이었다. 이러한 에너지는 성리학이 중심이 된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와 대한제국기에 폭발하여 한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였다. 그것은 신체호 등의 대종교인이 중심이 되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현대 민주화운동의 사상적 동인이었다.

그러나 한국 민족주의는 식민지근대화론·세계화·다문화에 편승한 '반한국민족주의' 세력이 점차 확산으로 한국 민족주의는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당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민족주의는 수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군학회가 분투하였으나 한국 민족주의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현대의 최대 과제는 통일민족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6.25내전을 정점으로 남과 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대결 속에 한국민족주의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8년 분단 70년이 된 올해 남북정상은 세 번에 걸쳐 한국 민족주의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이제 한국 민족주의는 과거 대일항쟁기의 '단군민족주의'에서 '통일민족주의'로 대전환을 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일민족주의의 완성단계인 통일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1)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2) 통일민족국가 완성을 위한 이론을 담당할 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3)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연구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5)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성과와 비젼(통일민족주의)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해야 한다.

2018년 연례합동학술회의

세션 2 〈발표 2〉

한국사회 역사관의 사색당파성

정형욱

(아주대 교수)

한국사회 역사관의 사색당파성

정형욱(아주대 교수)

학생: 교수님. 앞으로 향후 30년 후에 고조선의 민족적 정체성과 그 국가의 강역권 논쟁, 그리고 근현대사에서의 객관적인 진실여부를 둘러싼 역사적 옳고 그름(historical orrectness)에 관한 정치분쟁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교수: 역사는 인문학이고 정치중립적인 Matter이기에 그런 것이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 (1985년 9월초, 국제정치학 첫 강의시간에)

I. 문제제기

20세기말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전세계적인 좌·우이념 냉전(cold war)은 사라졌지만, 21세기가 되자 지구사회에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갈등과 충돌현상이 나타났다. 영토와 영해의 소유권에 대한 역사해석, 그리고 전쟁에 대한 기억을 둘러싼 도덕적 가치 논쟁과 같은 역사분쟁(history dispute)이 그것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 본다면,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촉발된 한국과 중국 간의 고대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정통성 소유권 논쟁,* 그리고 한국·중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전쟁과 식민지시대에 대한 역사왜곡 논쟁 등이 국제정치 분쟁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정치적 충돌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보자. A국가가 특정 과거역사에 대해 선점 또는 독점권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유리한 해석을 내놓는다. 그러나 그 역사에 대해 정치적 또는 영토적 이해관계를 가진 B국가도 A국가를 향해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정'(historical correctness)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선전·홍보하는 패턴이 빈번하게 반복된다. 따라서 A와 B, 양국 간에 정치적, 심지어는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조성된다.

자국 미래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빈번한 역사의 이용과 착취(history manipulation and exploitation)를 시도하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행위는 국가 간의 국제관계에서의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정형욱, 2013: 172).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역사문제는 타지역보다도 유난히 이 지역에서 국제정치이슈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편이다. 한국과 일본 간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과와 성노예(위안부)문제, 그리고 독도 관할권을 둘러싼 양국의 정치적 긴장은 양국 간의 대북 핵문제에 대한 공조의

* 최근 중국의 요하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발굴되는 고대문명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시원문명(예컨대, B.C. 35세기까지 올라가는 홍산문화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B.C 20세기 - B.C. 15세기의 하가점하층문화)으로 드러났다(우실하, 2007). 황제의 나라와 그를 둘러싼 지역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간의 정치적 상하관계를 규정하는 천자제도, 동아시아철학과 사상의 근원인 원시 유가와 선가, 그리고 용봉문화 등을 탄생시킨 이 문명이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와 기둥이 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문명의 주도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 한국과 중국 간에 미묘한 문명종통권 점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의 중앙에 고조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해석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고조선마저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역사해석에 착수하고 있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동북공정으로 인한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분쟁, 중일전쟁 당시의 남경학살문제로 인한 중국과 일본 간의 역사분쟁, 중국과 일본/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태평양과 남지나해의 섬들의 역사를 둘러싼 영토·영해분쟁 등은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역사분쟁을 넘어서 '역사전쟁(history war)'*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정형욱, 2013: 172-173).

그러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행위자 국가인 미국은 아직까지 '역사정치(history politics)'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다지 피부에 와 닫을 정도로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편이다. 중앙일보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우드로윌슨센터 등, 미국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싱크탱크와 대학의 동아시아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한·일 간의 역사문제 판정에 대한 여론조사(중앙일보, 2015년 8월 19일)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대상자의 90%는 역사적인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60%, 한국에 40%의 책임이 있다고 나왔다. 결론적으로 한·일 양자가 대중국, 대북한 포위망 구축을 위해서 서로 반반씩 정치적으로 양보하라는 것이다. 이게 미국의 주류사회의 생각이며, 한국의 대일본 역사공세에 대해서 그들은 점차 '한국 피로증(Korea fatigue)'을 느낀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까지 역사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실용적 의식(pragmatism)이 주류사회의 엘리트층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만큼은 역사가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영향력은 증폭될 것이라는 것을 미국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극단적인 예를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약에 일본의 아베정부와 그 배후의 극우파세력이 향후 '역사수정주의'‡를 발판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승리한다면, 그 다음 최종목표는'진주만 기습의 부정(denial of Pearl Harbor)'이 될 것이다. 즉 미국을 상대로 한 '태평양전쟁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인 것이다. 미국은 아직까지 일본의 역사정치 의도가 거기까지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동아시아지역에서 역사문제가 첨예한 국제정치의 갈등요인으로 자리 잡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로, 중국의 제국으로의 복귀의식 때문이다. 그것은 중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특유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대국중심 정치와 주종의 외교관계(천자(天子)의 제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의 조공정치체제)의 복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

---

* 한국에서 '역사전쟁' 이란 개념을 역사문제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학자는 윤명철(2004)이다.

† The Wall Street Journal Interview (April 12, 2017).

‡ 국제 학술계와 언론에서는 역사수정주의라는 표현을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역사왜곡주의(history distortionism)' 라는 개념이 정확하기에 이 개념을 강조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일본의 아베총리는 최근에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강제된 전후체제를 부정하고자 침략과 식민지 지배 등의 일본의 가해역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중앙일보, '아베 "점령시대 구조 바꿔야" 개헌위한 보수 총동원령.' 2015년 11월 30일).

** 2015년 9월 3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 전승절 7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중국정부가 세계 각국의 30명의 국가지도자들과 반기문 당시 UN사무총장을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을 모아놓고 자축한 것에 대해서 언론들은 이를 200년 전에 세계중심이었던 중국천하체제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하였

소련처럼 내부붕괴에 의해 '모자이크국가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초거대 에너지 소비 국가화하는 중국 자신의 안정적인 자원공급이 필요해서이기도 하다.

둘째로는, 일본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대륙으로의 복귀의식 때문이다. 일본의 대륙침략에 대한 군국주의사상과 시도가 근대화이후에 등장했다고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알고 있으나, 사실 백제멸망 이후 일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동아시아대륙으로의 복귀를 시도했다. 일본의 주류세력이 고대시대에 만주로부터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들의 무의식속에는 항상 그들의 조상이 지배했던 만주지역과 한반도로의 복귀에 대한 염원이 있다. 임진왜란은 그 첫 대규모 정치적 복귀시도이고, 20세기 초의 조선점령과 만주침략은 두 번째 시도였다. 일본은 대륙으로의 정치적 복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일 고대사 왜곡이라는 역사전략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본의 천황제는 일본주류세력의 뿌리가 과거 요하문명에서 기원하여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열도로 들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세키네 히데유키, 2007). 천황제는 천자문화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일본은 동아시아문명의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경인데도 한국 내에서 그동안 역사문제는 대부분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이슈와는 상관없는 고상한 학문세계의 영역에서 논의되던 지적 담론이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역사학계 내부에서 근·현대사부문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고·중세사부문에서는 주류사학파와 비주류사학파 간에 학문적 대립†으로 점철되어오면서 찻잔 속의 싸움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아카데미라는 온실에만 머무를 수 없는, 국가이익이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시민사회에 의해 도덕적 가치와 비판을 투여받는 정치사회의 전투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일본과의 역사분쟁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사회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서 한국사회의 통합된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한국정부는 효과적인 대외역사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그 일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이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동북아역사재단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세계관의 차이에 따른 한국사회 내부의 역사인식의 분열이 그 원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이념적으로 좌·우의 정치적 분열까지 일어나 4개의 분파로 쪼개지는 '역사사색당파(四色黨派)'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국내역사교과서 논쟁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민적 분열을 유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국사회 내부의 역사인식의 분열에 대한 담론을 기본적으로 정리할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한국사회가 민족주의와 대립각을 세우는 보편적 세계시민주의 패러다임의 인식으로 분열되어있음을 알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패러다임 마저도 좌우이념으로 보다 세분화되어 4가지 그룹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 일본축구협회의 엠블렘이 삼족오다. 삼족오는 천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아시아문화의 아이콘이다.

† 고중세역사학계의 주류사학파와 비주류사학파 간의 대립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담론은 정형욱(2014) 참조.

이를 위해서 이 글의 연구방법으로 현재 한·중,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쟁점에 반응하는 한국사회의 역사인식과 지식에 대한 정치적 담론의 수준을 일단 크게 두 가지 그룹(민족주의 우파/좌파, 세계시민주의 우파/좌파)으로 분석한다. 시민사회 담론에 대한 분석내용은 출판된 저서와 대중언론매체에 나타난 역사적 쟁점들, 특히 고대사에 대한 대표적인 한국사회의 지식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중심으로 다룬다.

II. 한국사회의 역사인식 대립: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현재 우리 사회의 '역사와 관련된 이념적 세계관'은 크게 민족주의(nationalism)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로 나눌 수 있다.*

민족주의는 다시 우파와 좌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파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 민족주의 사관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민족주의 좌파는 시민사회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등으로 상징되며 종종 그 입장이 북한의 역사관과도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다소 계급주의 역사성을 드러내며, 지난 1980년대-1990년대 동안 지식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주요한 역사 이론적 기반의 하나이기도 했다.

반면에 민족주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세계시민주의는 네 가지 개념으로 그 의미가 구축되어 있다. 첫째는 타인에 대한 의무의 강조다. 혈족에 대한 유대와 형식적인 시민적 연대감을 넘어 더욱 확장된 의무를 강조한다. 둘째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넘어 특수한 가치까지도 존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세계시민은 각양각색의 차이점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애피아, 2008: 22).

세계시민주의자들에게 '인간의 다양성'은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다. 세계시민주의 사상가인 애피아는 다음과 같이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고 폭넓은 인간 조건들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차이 속에다 사람들을 가두어 다양성을 강제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이의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헌신 없이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애피아, 2008: 194).

세 번째로 세계시민주의는 민족주의가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근대화론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허상이라는 인식을 기본전제로 출발한다. 세계시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인 베네딕트 앤더슨(2002: 25))은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족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해석으로 민족은 인위적인 정치적 의지에 의해서 18-19세기에 유럽에서 나타나 전세계로 퍼져나간 가상의 정치개념이라는 것이다.

---

* Nationalism을 이 논문에서는 민족주의로 규정한다. 그 이유는 최근 Nationalism을 '국가주의'로 해석하는 흐름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유전적, 문화적, 언어적 단일성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민족주의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이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국가는 국가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세계시민주의자들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구축되는 진정한 세계공화국의 건설을 꿈꾼다. 이는 각 개별 주권국가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발상인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세계공화국으로'라는 그의 저서(2007: 225)에서 글로벌 커뮤니티의 실현을 주장한다.

그런데 세계시민주의에도 좌우파의 구분이 존재한다.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우파는 소설가 복거일과 철학자 탁석산, 임지현 교수 등이 대표하는 입장으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시장질서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사회문화의 보편적 지구화를 강조하는 시민사회가 그 기반이다. 세계시민주의 좌파는 전통적 마르크스사상의 영향을 받은 좌파로 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우파 세계시민주의 양자를 동시에 반대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러시아출신인 박노자 교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1. 민족주의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진 시민 지식인들은 전체 한국시민사회가 냉혈한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자국역사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팽창시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한국시민사회는 역사인식에 대한 분명한 민족주의 지향적인 정치교정(political correctness)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인용 글은 한국고대사에 대한 전형적인 민족주의 우파의 시각을 보여준다. 필자인 허평환은 '자유민주통일연합회' 회장으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우파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던 오피니온 리더였다. 이들 우파 민족주의 세력은 최근의 중국 요하유역의 고대문명 발굴 결과와'환단고기(桓檀古記: 한단고기라고도 번역함)'와 같은 한민족에게 유리한 고대 역사기록들을 토대로 만주 고토수복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반격을 주장한다. 특히 북한정변사태 시, 중국의 한반도 북부 점유 가능성이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사학의 역사왜곡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허평환은 일제통치 기간 중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제외하고 수십만 권의 우리 민족 역사서들이 일본식민정부에 의해 강제로 수거되어 없어졌으며, 일본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남겨둔 이유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의 사국시대의 역사만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우리의 역사를 2000년으로 축소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삼국유사를 남겨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삼국유사가 단군조선을 신화로 그려놓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사회가 일본의 식민사관과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사관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역사서를'환단고기'라고 주장한다.

계연수 선생께서 우리민족 전래의 역사서를 집대성하여 편집한 한단고기를 해석한 우리민족 역사입니다....(중략) 이 배달국은 단기1565년 전에 개천하여 초대 거발한 한웅천왕으로부터 18대거불단 한웅천왕까지 18왕156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BC2333음력 10월3일 초대단군이신 한검천제께서 아사달 지금의 하르빈에 단군조선을 건국하였고 이 단군조선은 47대 고열가 단군까지 47대2096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데 단군조선은 44대 단군 구물께서 조선을 대부여로 개명하였고 이 대부여는 단기2094년 BC239년 1대 단군 해모수에 의해 북

부여로 건국되어 8대 단군 고주몽까지 8대200년간 이어졌습니다....(중략) 단군조선역시 결코 신화가 아닌 실존의 역사입니다. 역사광역 또한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과 시베리아에 걸친 광대한 대륙이었습니다. 발해 멸망일 이후 한반도로 좁혀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민족의 역사를 배달국으로부터 하면서 건국정신을 경천애인 제세이화 홍익인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중략) 우리는 일제가 조작한 역사를 우리역사인 줄 알고 단군을 부정하고 개천절의 의미도 모르고 있으며 개천절행사를 대통령이 주관하지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민족통일을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체제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과 중국은 역사를 조작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역사도 우리 것이 아니라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강Times, 허평환 칼럼,'위대한 우리 역사는 이렇습니다.' 2014년 11월 12일).

한편 보수적인 민족주의 우파세력은 중국이 한국의 역사문화를 침탈해간다는데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민족주의 입장에서 역사문화는 소유권이 분명한 존재이다. 201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중국의 문화유산 동북공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올해 5월 아리랑이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 외에도 이미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우리 문화유산이 중국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우리 문화재는 농악무, 널뛰기·그네타기, 퉁소음악, 학춤, 장고춤, 삼노인 공연극, 조선족 등 5개 소수민족악기, 환갑잔치, 전통혼례, 전통복장, 가야금, 판소리, 조선족 회혼례, 조선족 씨름, 추석 등이다. 한 의원은 "3차례에 걸친 우리 문화유산의 약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약탈조차 당사자인 우리는 2010년 8월에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농악무와 아리랑 등만으로 문화유산의 약탈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자존심인 한글이나 김치도 언제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둔갑해 등재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우리 문화유산을 국보로 지정해 우리 것임을 공고히 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서둘러 등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is,' 국정감사 문방위, 중국 동북공정문제 질타,'2011년 9월 20일).

우파 민족주의 시민사회는 국회의 보수적인 우파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고・중세역사학계의 주류사학파가 식민사학에 오염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주류사학파의 담론을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넣기도 한다. 동시에 한일역사교과서 공동연구를 주도하는 세계시민주의 지향의 사회세력과 학자들을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좌파 세계시민주의 세력의 주도로 집필되는 교과서에서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역사쟁점과 역사관이 삭제당하는 점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하기도 한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 문제를 지적했다. 김의원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부정한 것에 대해 "한일 역사의 공동연구라는 명분하에 일본 학자들 손에 우리 역사가 농락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유관순 열사 관련 내용이 일부 역사교과서에서 제외된 데 대해 "역사 왜곡이 아니냐?"고 따졌다. (부산일보,'텅 빈 교육 곳간 누구 탓? 여야 뜨거운 설전,'2014년 11월 5일).

반면에 좌파 민족주의 사관은 1990년대 초반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제3세계 민족주의의 쇠퇴로 국내 시민사회에서 그 명맥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정부 이후 국제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문화가 지구화라는 이름하에 국내 시민사회에 영향을 줌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과 관련된 역사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의 역사관이 이에 해당하지만, 주사파의 몰락으로 이 사관을 주장하는 세력을 우리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그러나 지구화에 따르는 빈부격차의 급증, 대량의 이주민 정착에 의한 다문화사회의 혼란과 같은 세계화의 문화적 부작용이 급증하면, 좌파 민족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아래의 담론은 그러한 좌파 민족주의의 인식을 보여준다.

'전진적•개방적•시민적•합리적•열린' 민족주의와 같이 민족주의의 전투성을 거세하는 온건한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중략) 민족주의가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전투성이 진보적인 대안과 결합되었을 때 신자유주의를 격파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를 돌아보라. 룰라 류의 '어설픈'대응보다 차베스 류의'확실한' 대응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가?(민경우, 2007: 222).

최근 2018년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급격한 남북교류의 물살을 타고, 남한과 북한의 통일 내지는 화합을 추진하자는 민족주의적인 흐름이 한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한국사회의 수면 위로 다시 활발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좌파 민족주의세력의 활성화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 세계시민주의

21세기 지구화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역사관이 세계시민주의다. 민족주의가 주춤하는 가운데, 세계시민주의는 국내 시민사회의 서양식 현대화 역사교육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지대해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 경향신문은 2013년초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김중태가 주류사학파가 아닌 비주류사학파의 가장 극단적인 민족주의 담론을 주장하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관이 너무 국수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경향신문,"인수위원이 신봉하는 국수주의 역사관" 2013년 1월 12일). 김중태는 고대 동이족의 지배영역이 만주일대와 중국본토 동부해안지역을 아우르는 거대국가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었다.

---

* 노무현정부 당시에 열렸던 남북한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의 수석대표였던 김영철은 남측의 수석대표였던 한민구에게 남한사회가 동남아시아 여자들을 수입해서 농촌총각들과 국제결혼을 시킴으로써 한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오염시킨다고 격렬히 비난했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소된다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주제가 남북 간에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실체 없는 우상이라 보고, 이를 파괴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우파 시민자유주의자인 복거일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기존의 한국사 내용이 아예 민족주의를 넘어 국수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시사저널. 2013년 8월 14일).

시민에 의한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정부의 역사문화정책을 담당했던 유흥준 교수 역시 대표적인 세계시민주의자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한·일 역사문제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일 간의 불편한 관계는 그릇된 역사 인식과 역사 왜곡에서 비롯된다. 한일 양국의 역사서들은 곳곳에서 편협한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고대사 서술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일부 역사학자들은 한일 양국 모두의 극단적인 역사 왜곡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고대사 콤플렉스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인은 근대사 콤플렉스 때문에 일본 문화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한일 양국은 모두 이 콤플렉스의 색안경을 벗어던져야 한다. 한일 문제와 한일 교류사를 일방적 시각이 아니라 쌍방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중략) 그 현장에서 유 교수는 민족주의적 편협성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일본이 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영향을 뛰어넘어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 감각까지 키우기에 이르렀다고 봤다. 그렇게 성장한 일본의 역량에 찬사를 보내는 그는“우리는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이웃 나라 일본의 이런 문화적 성취를 평가하는 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중략) 유 교수는 서로의 근본에 대한 인정과 올바른 역사 인식이 아시아의 문화적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에서 당당한 지분율을 갖고 있는 동등한 문화적 주주 국가로서 서로를 인식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공생하는 길이라고 했다....(중략) 유 교수는 한일 양국의 공존과 공생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누군가는 쌍방의 비난에 당당히 맞서지 않고서는 한일 고대사의 유대를 성공적으로 복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흥준 교수, ‘색안경 벗어던지고 문화를 보다,’시사저널, 2013년 8월 8일).

한편으로 동아시아 역사문제에 대해서 좌파주의적 세계주의의 담론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다음 인용문은 역사에 대한 좌파 세계시민주의적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아화여대 중어문학과 정재서 교수는 좌파적 시각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이익의 충돌이 한중 양국 간의 문화충돌로 이어져서 역사갈등이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정교수는 두 나라가 배타적 민족주의와 대국주의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교수는 한중 간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양국 친선관계에 균열이 생겼는데 그 이유를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등록을 들었다.

정 교수는 "동북공정은 과거 중국에 대한 한국의 호감을 일시에 악감으로 바꾸어놓은 큰 사건"이라며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킨다는 동북공정의 구상은 한국사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발상으로 결국 한국 내에서는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고 민족주의적 성향이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중국 측에서는 고유한 명절로 인식하던 단오절을

한국이 유네스코에 먼저 등록해 문화를 침탈당했다고 분노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 사건들이 갈등을 촉진시킨 도화선이었지만 근간에는 민족주의 정서가 충돌하면서 문화갈등이 빚어진 것"이라며 "양국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피해의식, 문화산업을 둘러싼 경제적 충돌 등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에 "두 나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물질적 성공 이후 팽배해진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적극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중국도 주변국과 관련된 역사문화를 다룰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양국 학술계와 문화계 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서 이화여대 교수, "한중 문화 갈등 해결하려면 배타적 민족주의 벗어나야," 서울경제, 2014년 5월 9일).

정재서 교수는 동아시아 역사분쟁의 원인을 역사 그 자체보다는 한•중•일 삼국의 천민자본주의의가 왜곡되어 파생된 정치경제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래 한윤형 기자의 기사의 경우에도 사회운동권 전력을 배경으로 한 지식인으로, 좌파 세계시민주의 시각에서'환단고기'와 같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역사책이 극우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기자는 한국의 보수우파가 자신들의 친일행위 컴플렉스와 군부독재정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군부 독재자들도'민족'을 강조해야만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근대사회에서 '국가'를'국민'보다 높이기 위한 유일한 매개체였기 때문이다....(중략) 근대사회에서'국가'의 권위를 내세울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시민들의 합의로 만들어낸 공동체'였을 것이나, 물론 군부독재세력이 이를 택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것은'민족'이었다. 20세기에 식민지배를 경험한 이 나라에서,'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았다.'민족'을 경유했을 때에야'국가'는 드디어'국민'의 생사여탈권까지 가진 초월적이고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한국의 극우파는 물론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했지만 그들 역시 민족주의를 활용했다. 남북한이 서로를'괴뢰'(꼭두각시)라고 비난해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상대방을 반민족적이라고 규탄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중략) 군부독재세력, 극우세력의 입장에서 '민족주의'는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면역체계였다....(중략) 그렇기에 한국 극우는 상고사의'환빠'와 근현대사'친일 독재 미화'가 공존하는 분열증적 상황에 처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관료 중에서도 괜히 상고사에 대한'재야사학'적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있으며, 이들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온 상황이다. 얼마 전 총리후보로 지명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문창극 전〈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자신은'친일파'가 아니라'애국자'라 떳떳하게 강변할 수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조선이 대륙의 지배자였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일본에 의해 근대화됐지만 결국엔 일본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 '애국자'를 상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Media US, 한윤형 기자,"'환단고기' 가르쳐, '친일파 애국주의자'를 만들 것인가' - 민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국정화 역사교과서 흐름,"2014년 9월 26일).

한기자는 그러나 그런 이들 보수우파 민족주의자들이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선 침묵

한다고 비판한다.

III.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양자 역사인식체계에 대한 비판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은 의외로 한국역사학계의 갈등에서 기인한다. 한국역사학계는 크게 주류사학파와 비주류사학파로 분열되어 있다.

한국의 고·중세사학계의 주류사학파를 역사인식체계에서 굳이 규정한다면, 세계시민주의 우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류사학파는 한국에 불리하고, 중국과 일본에 유리한 고대사의 기록일지라도 국제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주류사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노태돈은 한 사립대학교의 학술제의 토론에서 북한정변 시, 중국이 (한사군 지배와 같은) 역사적인 이유로 북한을 점유할 수 없으며, 오히려 1953년의 한국전쟁 정전조약의 주체로서 개입을 내세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제지역분쟁에 관해서 민족주의와는 다르게 주류학파는 역사 조작과 정치 헤게모니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인 비주류사학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역사서술이 철저한 국제정치의 파워게임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주류학파가 정치적으로 비주류학파를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주류사학파가 점차 한국에 유리하게 드러나는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물들과 식민주의 사학에 영향 받은 주류학파의 당파성 때문에 비주류학파의 학문적인 성과물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대표적인 비주류학파 학자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은 주류학계의 학문적 배타성을 공격하면서 주류학파가 비주류학파를 비과학적인'재야사학' 또는 '유사사학'이라 매도한다고 했다.

그러나 비주류사학파 역시 소수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족주의 우파 정치세력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기사는 비주류학파가 주장하는 주요 역사 쟁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정부, 정치권에서 비주류 학설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주류 학자들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다. 중국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고 보는 '한사군 한반도설'이 하나다.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고대 한반도는 중국의 강역이 되어 동북공정에 대응할 논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임나일본부설'이다.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인데,'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과 연결된다. 일제의 학자들은 임나일본부의 존재를 기술하지 않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불신론을 적용하면 삼국의 실질적인 국가체제 성립 시기는 4세기까지 늦춰져 한국 고대사의 발전이 그만큼 더뎠다는 의미가 된다. 비주류 학자들은 이런 주장이 정설로 굳어진 근원을 역사학계의'태두'로 꼽히는 이병도에게서 찾는다. 식민사학 정립의 한 축이었던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한 이병도와 그의 서울대 출신 제자들이 학계를 장악하면서 식민사학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다....(중략) 이 소장은 주류 학자들이 그들만의'유토피아'를 만들어 식민사학의 논리를 지금까지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의 인식이 과장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주류의 철옹성 같은 지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 노태돈. '낙랑군에 대한 최근의 논의.'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사학제. 2015년 11월 5일.

는 대체로 동의한다. 최근 정치권, 정부에서 비주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가고 있는 흐름은 이런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의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가 대표적인 경우다....(중략)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지난 7월 특위에 참석해 최신 고고학 성과를 반영하는 것에 소극적인 주류학계의 풍토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위 위원장을 대리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실 관계자는 “비주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라며 “특위는 예산편성권이 없지만 관련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비주류 학자들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조치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주류학계 고대사연구, 식민사학 반복하고 있다,’2014년 10월 8일).

물론 보수우파 지식인의 반론도 있다. 문화평론가인 박정진은 주류사학파를 식민사학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시민주의와 민족주의 양쪽에 있는 좌파적 역사인식을 공격한다.

독자적으로 일관된 텍스트(국사와 철학)를 쓸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의 인문학은 사대·식민주의와 식민시대의 상처와 흔적에 따른 노예적 분노로 아직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주인(주체)이 되는 것은 인류문명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꿰뚫어볼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만큼 한국문제는 세계문제·인류문제와 직결되어 있다....(중략) 좌파성향의 검인정 교과서를 배운 청소년들은 그동안 정체성 혼란을 겪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발전과 혜택을 누리면서도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해야 하는 심리적 도착과 분열에 빠진 이들에게 조국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한의 이념투쟁을 보면 압도적인 북한우위를 읽을 수 있다. 남한에는 여러 이념들(민주주의도 그중 하나이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고 국민소득의 증대로 이념투쟁의 필요성과 강도가 떨어진 반면, 북한은 김일성주의 하나만이 존재할 수 있고 빈곤은 이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김일성종교는 이념투쟁에 한민족의 조상인 단군신화를 전략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신화화를 촉진시키고 민족정통성의 면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북한·고구려 중심의 민족대륙사관은 북한의 정통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역사전문가들은 대체로 실증사학의 이름하에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다. 남한의 기독교 세력들은 단군을 미신과 우상으로 배척하고 있다. 교과서 파동은 고대신화에서부터 현대 국가체제에 이르기까지를 통째로 흔들면서 당파와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가장 슬픈 현실은 식민사학자들과 민중사학자들이 서로 다른 목적에서 검인정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명목하에 식민사관의 존속을 위해서, 후자는 좌파이념을 젊은 층에게 효과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인정의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한국사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고대사는 식민사학자들이 왜곡하고 현대사는 민중사학자들이 왜곡하고 있다. 한국사는 이중의 협곡에 빠져 있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가 아니라 여러 오랑캐에 제압당한 것이 한국사 교과서의 현주소이다(세계일보,‘[박정진의 청심청담] 표류하는 불쌍한 한국사,’2015년 10월 19일).

이러한 와중에 역사문제가 정치권에 연계되면서 민족주의는 보수적인 우파 정치세력과 어쩔 수 없이 결합되고, 세계시민주의는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반대인 진보좌파 정치세력에 연

결되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역사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수가 있다. 다음 인용문은 그러한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직접 관련학자들을 만날 만큼 정부가 상고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한 것은 정치권의 압력, 그 배후에 깔린 민족주의적 사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 우파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널리 확산되면서 '민족의 영광'을 확인시켜 주는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중략)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6월 구성된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상고사 연구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2월에는 특위가 상고사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해 8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 산하에 '역사 바로쓰기'기구를 설립해 정파와 역사관을 떠난 중립적인 학자가 모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써야 한다."며"조선사, 특히 상고사가 너무 왜곡됐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중략) 상고사 지원을 주도해온 김세연 의원 측은 "한사군과 왕검성의 위치, 고조선 영토 크기 등 기존 학계의 연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보니 교과서도 치우쳐 있다"며 "재야사학자들이 사료를 부풀려 고조선사를 확대 해석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들에게도 연구를 지원해 학문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상고사를 확대 해석하는 관점은 보수 우파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는 시각이 많다. 영광스러운 고대사를 복원해 민족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아보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학계에서는 위서로 평가받는 상고사 역사서 〈환단고기〉의 한 구절인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國猶形) 역사는 혼과 같다(史猶魂)'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중략) 재야사학계의 검증되지 않은 학설이 범람할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임기환 한국고대사학회장(서울교대 사회과 교수)은"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학계의 고조선 연구가 100% 맞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야사학계는 근거 자료와 반대되는 자료가 있는데도 자기 입맛에 맞는 내용만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연태 한국역사연구회장(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은 "정부가 오히려 재야사학자의 의견이 옳고 전문학자는 식민사학의 후예로 몰아가는 구도가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민족주의 정서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한 역사학과 교수는"고대의 영광을 통해 현재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면서"역사를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국역사연구회 이정빈 고대사 분과장은"민족이라는 구심점 아래 국민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상고사 지원확대 배경엔 정치권 입김과 민족주의 정서 활용 의도,'2014년 4월 1일).

이러다보니 온건한 중도주의자들이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사이에 찡겨서 어정쩡하게 당황스럽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아래 인용문이 그런 사례를 보여준다.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이들 중에는 외국 문물이라면 무턱대고 배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단지 우리 전통이므로 무조건 좋다는 입장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고사 연구하는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예컨대 〈환단고기(한단고기)〉 같은 책은 '위서' 논란이 늘 따라다니잖아요. 무조건 믿기는 어려운 내용이지요. 제가 〈환단고기(한단고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니까 서운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다니는 나조차도 믿기 힘들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우선 나부터 설득해 보라."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소장,'전통문화 사랑하면 국수주의자? 천만에!'프레시안, 2009년 8월 22일).

융통성 있게 개방적인 온건한 중도주의를 추구하는 일부 시민사회에게 경직된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충돌은 이들의 운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해방 후와 한국전쟁의 와중에 중도정치세력이 희생당하면서 한국정치가 극단적인 좌우의 경색된 대립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발전이 왜곡되어온 과정을 역사분쟁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공세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20세기말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 사실 중국의 동북공정의 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중국과 관련된 역사문제에 한국사회는 정치적인 주제로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관련된 고대역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왜곡이라는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이유로 우선 한국사회의 현대서양문명론과 사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대주의적 인식의 번성과 그에 따른 민족주의에 대한 편견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었다. 사실 지금도 상당한 한국사회의 지식인들과 주요 언론마저도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한국이 과잉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대동아시아시대의 고구려나 발해가 오늘날 한민족의 민족주의적 정체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지구시민사회의 보편주의적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거나 탈근대주의적 세계의 도래에 대한 서구적 시각으로 계몽된 세계시민주의 지식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임지현 교수로 대표되는 보편적 세계시민주의 지식인들의 주장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에게는 '열린 민족주의'조차도 배제해야할 만큼 민족주의 그 자체는 인류역사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라져야할 낡은 사회적 가치이다. 민족이란 근대 이후 조작된 개념이며, 민족보다는 세계화 속에 살아가는 다문화적 민주시민의식의 가치를 보다 더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임지현, 1999).

주류사회의 여론을 리드하는 중앙일보에 실린 서울대 송호근 교수의 컬럼(2014년 12월 16일)에서도 이 논리는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는 '아직도 민족시대?'라는 타이틀로 120년 전에 발명된 민족시대에서 세계시민으로 시대지평을 넘겨야 통일의 문이 열리는데, 동북아시아 4개국의 민족주의가 화염에 휩싸여 이 지역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는 중앙시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민족의 일원이기 보다 지구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중앙일보, 2018년 4월 7-8일).

같은 중앙일보에 실린 또 다른 칼럼(2014년 6월 30일)을 보자. 정재숙 논설위원은 한류스타인 김수현과 전지현이 출연한 중국 생수회사의 CF에서 백두산이 장백산으로 생수의 원산지가 표기된 것에 대해 우리사회가 격렬히 비난하자, 다시 세계시민주의 입장에서 이를 역으로 비판한다. 그녀는 우리가 지나치게 과잉반응 한다면서, 좌•우 할 것 없이 싸구려 국수주의가 한•중•일 모든 동아시아 국가에서 판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건강한 시민의

존재가 희망이라고 역설한다.

세계시민주의 우파의 입장에서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은 위험한 정치감정이라고까지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의 송재윤 교수는 지적한다(중앙일보, 2014년 1월 28일). 전형적으로 세계시민주의에 의해 계몽되고 학습된 한국사회의 주류지식인들의 역사인식이다.

분명히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가치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할 덕목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근대이후에 정립된 정치적 개념인 서구의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국가주의'로 번역해서 순수한 의미의 혈연공동체적인 '민족주의'와 구별해야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국가주의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이질적인 민족들을 한 국가체제 내로 우겨넣어서 통제하는데 성공한 편의적인 정치적인 기제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주장되는 민족주의는 혈연적이면서 동일한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자연적인 가족운명공동체적인 종족주의(ethnicism)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주의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민족주의적 아이덴티티를 포기한 일부 세계시민주의파 지식인 중에는 일관성 없는 사대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우파 세계시민주의 지식인의 대표자격인 복거일은 '한문문명권의 역사와 미래'라는 칼럼(중앙일보, 2015년 9월 10일)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한국은 미국의 군정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행운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자라났다. 특히 외부지향적 정책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그 자체로 큰 성취이면서'종속이론'에 끌리던 뒤진 사회들에 올바른 발전 모형을 제공했다. 이 사실이 우리 자긍심의 바탕이다.

현재 슈퍼파워국가인 미국중심 서양문명 예찬론자의 전형을 복거일은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박노자는 대표적인 세계시민주의 좌파지식인이지만, 그는 동시에 친중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아래 한국의 친중국화를 주장하는 그의 칼럼은 2009년에 레디앙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어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레디앙. 2009년 9월 14일). 특히 친미적인 보수우파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이에 따라 무역 질서가 곤란에 빠질 경우에는 한국으로서는 아마도 유일하게 4~5%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하는 것은 유일한 선택일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한미FTA를 고집하려는 국내 일부 '친미 완고파'들의 행동은 1890년대 초반의 친청 민씨 세도가들의 행동과 거의 똑같이 보일 뿐입니다. 완고파들이 뭘 원하든 간에'상전 나라'로서의 미국은 이제 머지않아 과거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중화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사실 남북한의 평화 공존, 교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몇 십 년 후에 만약 이북의 왕조와 이쪽 지배자들 사이에 통일조약이 맺어진다면 북경에서 맺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죠오몽인(일본의 원주민)과 야요이인(B.C 300년 - A.D 300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이 섞여 있는 2중유전적 구조의 인종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에 반해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동일성을 지닌 한국인에게는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는 단일민족적 분포를 보인다. (동아사이언스. "오모토 교수 인터뷰 - 일본인 혈통 80% 한반도 등에서 유래" 2002년 2월 4일).

이걸 가치 평가하시기 전에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파든 좌파든 한국사회에서의 세계시민주의라는 이념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다시 말해 그 때 그때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와 정치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줏대 없이 쏠려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또 다른 형태의 '사대주의'라는 것이다. 역사기술에 엄밀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하고 그 객관성의 기준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시민사회의 규준(norm)에서 나와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행동으로 그 타당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그 규준이 허상일 수 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한국시민사회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고, 세계시민주의는 이 재고찰을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와 같은 공격적인 국가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방어적 정치기제이다. 이러한 방어적인 민족주의는 오히려 개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모든 인종과 문화가 하나로 단순하게 섞여버리는 도가니(melting pot)형 세계화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태학적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개체가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될 경우 그 종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외부의 충격으로 멸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러브록, 1992).

중국의 도가니형 역사왜곡전략 공세는 장기적으로 한민족에게는 정체성의 혼란과 중국문화로 흡수되는 위기를 부추기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럴 때 한국의 방어적 민족주의는 인류역사의 보편적 진실을 오도하는 잘못된 중국의 역사의식을 바로 잡고 견제하면서 한민족 공동체의 정체성 보전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와 남만주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족주의'적 의식을 단순히 서구의 세계시민주의 사회문화적 개념의 해석에 따라 근대국가수립(modern nation-building)을 위한 상징적 정치조작에 홀린 집단주의로 몰아붙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세계시민주의로 대표되는 탈민족주의적(post-nationalism) 역사해석의 접근방식†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를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힘없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시민주의 문화논리가 상당히 많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이념적 지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했던 좌익 시민단체와 환경운동단체들이다. 그들의 논리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 동아시아에서 각국 간에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방기지로 제주도가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물론 환경보호주의적 관점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러나 제주도 해군기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중국은 이미 제주도 앞바다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했고, 그들의 군용기를 자주 의도적으로 한국측 EEZ(배타적 경제수역)해역에 출몰시키고 있다.‡ 미국과는 상관없는 한국에 대한 정치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지역 장악을 노리는 지난 5천년 간의 전통적인 정치전략을 인지한다면, 그렇게 단순히 반한·미동맹 인식에

---

* 윤명철(2004: 114-115)은 동북공정을 신중화제국주의 또는 중화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한다.

† 중앙일보. "열린 민족주의도 바탕은 민족 절대주의" 2004년 11월 25일.

‡ YTN.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배경은?" 2013년 12월 2일.

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사회는 특히 진보적 좌파시민사회는 단순한 반미주의 코드에서 동아시아전략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한다.

물론 민족주의 역시 극우보수우파의 정치에 수용되어서 반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로의 후퇴를 촉진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것도 동아시아 역사왜곡의 수정을 위해서 중요하다.

Ⅳ. 맺음말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새로운 대안사관의 정립이 한국과 중국·일본 간의 역사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에 필요한 때이다. 지금 한국이 역사에서 패권우위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일본이 패권우위의 역사를 정립할 것인지에 이 지역국가들이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국가들의 정치적 갈등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위한 대안으로서 한 독특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의 제안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테면, 주체사상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북한의 독특한 고립주의노선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북한의 정치적 전략은 아니라는 점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해보면, 전통적으로 고조선•고구려와 같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탄생했던 국가들은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 중원의 거대 제국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김용옥은 고조선과 고구려지역에 중국과 대등한 거대한 문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대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서 과도한 중국문명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탄생했던 국가들은 '당시로 보면 일종의 소지구화(mini-globalization)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어떤 형식으로든 친하게 지내면서 시대에 순응하는 정책을 썼다. 근세에도 만주에 근거를 두고 중국을 다스렸던 청(淸)제국 역시 만주를 일종의 금단지역으로 정하고 한족(漢族)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중국본토를 통치했듯이 만주 고유문화와 영역을 지키려는 노력 (결국은 실패했지만) 역시 그러한 고립주의 전통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고립주의적 정치와 외교노선에 대한 해석도 동아시아 과거의 역사적 전통의 영향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고조선과 고구려가 포함된 만주지역사(滿洲地域史)를 만주 고유의 역사로 볼 것인지, 중국의 속지주의 역사관대로 중국의 내부역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속인주의 관점을 인정할 것인지는 어느 당사국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축적된 노련한 연구의 성과를 통해 지루한 국제정치게임에서 헤게모니를 잡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 일부에서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일부 지역의 역사를 중국과 한국 사이에 쟁탈전을 치러야하는 정치적 대립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고, 중국사와 한국사를 넘어서'만주와 한반도 북부지역사'라는 공동의 역사로 인정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한다(우실하. 2007: 386-396). 그러나 이러한 이상주의적 입장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

* 북한체제노선을 옹호하는 듯한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이론에 대한 담론이 다른 독립적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 중앙일보. '중국과 대등했던 고구려 이해해야 진정한 통일.' 2015년 12월 4일.

통일을 강력히 지향하는 한국의 보수적인 우파 시민사회의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붕괴 시에 북한의 일부를 점령하여 미국의 힘이 만주에 미치지 못하게 일종의 완충지대(buffer zone)를 만들려는 중국의 반통일적인 전략을 생각할 때에 현실주의자들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 지역국가들 간의 평화를 추구하려는 세계시민주의 이상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격적인 국가주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를 정립하는 것이 지역분쟁을 막으려는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름대로 타당하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이러한 한국과 중국·일본의 역사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의 아젠다 수립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민족주의파건 세계시민주의파이든지 간에 중국·일본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시민사회와의 '역사적' 대화를 위해 '역사교류'에 지대한 사회문화투자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일본의 시민사회는 다시 그들의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정치사회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가라타니 고진(2007).『세계공화국으로』. 서울: 도서출판 b.
김영명(2002).『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서울: 오름.
김우준(2008). “중국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 중국내 이견활용과 한·중 역사 네트워크 형성.”『백산학보』. 제80호: 303-332.
김철민(2000). “코소보 민족갈등에 관한 연구: 세르비아니즘 확대와 저항이라는 관점에서.”『동유럽발칸학』. 한국동유럽발칸학회, 여름호 No. 2: 195-218.
노태구(1995).『세계화를 위한 한국민족주의론』. 서울: 백산서당.
러브록, 제임스(1992).『가이아의 시대: 살아 있는 우리 지구의 전기』. 서울: 범양사
문안식(2012).『요하문명과 예맥』. 서울: 혜안.
민경우(2007).『민족주의 그리고 우리들의 대한민국』. 서울: 시대의 창.
박노자(2009). “중화경제 편입만이 한국의 살 길.”『레디앙』. (9월 14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480
(2010).『거꾸로 보는 고대사』. 서울: 한겨레출판사.
(2012).『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서울: 한겨레출판사.
베네딕트 앤더슨(2002).『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복거일(2013).“일본의 극우망언 뿌리는 서구 문명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비롯.” 『시사저널』. 1243호. (8월 14일).
세키네 히데유키(2007).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연구와 패러다임.”『민족문화연구』. 제47호: 389-433.
송기호(2007).『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서울: 솔.
우실하(2007).『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서울: 소나무.
울리히 벡(2010).『글로벌 위험사회』. 서울: 길.
윤명철(2004).『역사전쟁』. 서울: 안그라픽스.
이기호 외(2006).『동북아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발전방안과 모델: 평화, 역사, 지식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지명(2004).『넘쳐나는 민족 사라지는 주체』. 서울: 책세상.
임지현(1999).『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정형욱(2013).“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분쟁과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NGO연구』. 제8권 제2호: 171-192.
(2014).“한·중 역사갈등에 대응하는 한국전략 비판: 고조선강역 담론을 중심으로.”『선도문화』. 제16권: 181-219.
차남희 외(2010).『한국 민족주의의 종교적 기반』. 경기도 파주시: 나남.
콰메 앤터니 애피아(2008).『세계시민주의』. 서울: 바이북스.
탁석산(2004).『탁석산의 한국의 민족주의를 말하다』. 서울: 웅진.
경향신문

동아사이언스
동아일보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중앙일보
한국일보

2018년 연례합동학술회의

세션 2 〈토론〉

윤창원(서울디지털대 교수)

김지영(숭실대 교수)

황재동(새만금이주민센터 센터장)

신용우(간도학회 이사)